

# 한국의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f Civic Consciousness on Social Cohesion in Kore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노대명  
우선희





## 제출문

본 보고서를 『한국의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연구』의 최종 연구결과로 제출합니다.

201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 머리말

사회통합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화두이자 정책의제로 떠오른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계층간 갈등은 심화되고, 또한 민주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거침없이 분출되기 시작한 것은 더 이전의 일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갈등으로 인식하고,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가 다양한 영역에 걸친 갈등적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 측면이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회통합과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그것을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다. 이번 2012년 조사와 분석은 벌써 세 번째 진행되는 것이다. 비록 조사의 목적과 특수성에 따라 조사의 규모나 방식 등이 다소 변화하긴 했지만, 사회통합과 관련된 같은 문항에 대해 동일 기관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이렇게 생산된 자료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일 것으로 자평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통합과 관련된 국민의식의 주요 측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 윤곽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사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본 연구원의 강신욱 연구위원과 노대명 연구위원, 그리고 우선회 전문연구원에게 감사하며, 또한 조사를 직접 수

행하면서 조사 자료의 품질을 위해 애써주신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이선관 선생  
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향후에도 이 조사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제고하기위한 학술적, 실천적, 정책적 노력의 귀  
중한 자료로 축적되기를 바란다.

201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요 약 .....	1
<b>제1장 서론</b> .....	15
제1절 연구의 배경 .....	15
제2절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18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목적 .....	21
<b>제2장 사회통합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b> .....	25
제1절 이념적 성향 .....	25
제2절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	29
제3절 이념적 성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 .....	36
제4절 소결 .....	40
<b>제3장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b> .....	45
제1절 영역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45
제2절 시급히 대응해야 할 갈등 .....	61
제3절 소결 .....	63
<b>제4장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b> .....	67
제1절 문제제기 .....	67
제2절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변화 .....	68
제3절 사회적 결속력의 변화 .....	84
제4절 소결 .....	95
<b>제5장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b> .....	99
제1절 사회통합의 전제조건 .....	99
제2절 사회통합성 강화의 중심 기관 .....	102

제3절 소결 .....	105
--------------	-----

<b>제6장 계층의식과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 .....</b>	<b>109</b>
------------------------------------	------------

제1절 주관적 계층의식 .....	109
--------------------	-----

제2절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 .....	111
-----------------------	-----

제3절 소결 .....	115
--------------	-----

<b>제7장 주요 결과 및 시사점 .....</b>	<b>119</b>
------------------------------	------------

제1절 주요 조사 결과 .....	119
--------------------	-----

제2절 사회통합 정책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 .....	120
-------------------------------	-----

<b>참고문헌 .....</b>	<b>123</b>
-------------------	------------

<b>부록 .....</b>	<b>125</b>
-----------------	------------

[부록 1]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조사표 .....	127
------------------------------------	-----

[부록 2]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기초분석 결과 .....	133
--	-----



## 표 목차

〈표 1-1〉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분포 .....	17
〈표 2-1〉 집단별 이념적 성향의 분포 .....	27
〈표 2-2〉 주요쟁점과 이념성향 상관관계 .....	37
〈표 2-3〉 이념성향의 설명 요인 .....	38
〈표 3-1〉 영역별 갈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 .....	60
〈표 3-2〉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 .....	62
〈표 4-1〉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추이 .....	75
〈표 4-2〉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기회균등 그리고 준법정신에 대한 태도 변화 .....	87
〈표 5-1〉 사회통합 강화의 전제조건 .....	99
〈표 5-2〉 집단별 사회통합 전제조건의 인식 차 .....	101
〈표 5-3〉 시급한 갈등 인식에 따른 사회통합 전제조건의 인식 차 .....	102
〈표 5-4〉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 .....	103
〈표 5-5〉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에 대한 집단별 인식차 ....	104
〈표 5-6〉 사회통합의 전제조건과 사회통합의 중심기관 .....	105
〈표 6-1〉 현재 소득계층별 10년 후 계층 이동 기대 .....	113
〈표 6-2〉 집단별 계층이동에 대한 기대 분포 .....	114

## 부표 목차

〈부표 1〉 조사대상자 특성별 분포 .....	133
〈부표 2〉 이념적 성향 분포 .....	134
〈부표 3〉 우리사회 주요 쟁점 .....	134
〈부표 4〉 갈등 인식 .....	134
〈부표 5〉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 .....	134
〈부표 6〉 공공기관 신뢰도 .....	136

〈부표 7〉 가장 적합한 갈등관리 주체 .....	136
〈부표 8〉 사회적 귀속감 .....	136
〈부표 9〉 나눔 및 자원봉사 활동 참여 정도 .....	136
〈부표 10〉 기업이나 부유층의 봉사활동이 사회통합 기여 인식 .....	137
〈부표 11〉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	137
〈부표 12〉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 가장 중심적인 역할 기관 .....	137
〈부표 13〉 계층의식 .....	137

## 그림 목차

[그림 2- 1] 이념적 성향 .....	25
[그림 2- 2] 집단별 이념적 성향 비교(연령대, 학력, 지역별) .....	28
[그림 2- 3] 집단별 이념적 성향 비교(종교, 소득구간별) .....	29
[그림 2- 4] 경제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이다' 에 대한 응답 분포 .....	30
[그림 2- 5] 집단별 성장과 분배의 우선에 대한 인식 .....	30
[그림 2- 6] 북한에 대한 인식 .....	31
[그림 2- 7] 집단별 북한에 대한 인식 비교 .....	32
[그림 2- 8]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에 대한 응답 분포 ...	33
[그림 2- 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의 집단별 비교 .....	34
[그림 2-10]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확대에 대한 인식 .....	35
[그림 2-1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확대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 .....	36
[그림 3- 1] 계층갈등에 대한 인식 .....	46
[그림 3- 2] 집단별 계층갈등에 대한 인식 .....	47
[그림 3- 3] 노사갈등에 대한 인식 .....	48
[그림 3- 4] 집단별 노사갈등에 대한 인식 .....	49
[그림 3- 5] 이념갈등에 대한 인식 .....	50
[그림 3- 6] 집단별 이념갈등에 대한 인식 .....	51

[그림 3- 7] 지역갈등에 대한 인식 .....	52
[그림 3- 8] 집단별 지역갈등에 대한 인식 .....	53
[그림 3- 9]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	53
[그림 3-10] 집단별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	54
[그림 3-11] 남녀갈등에 대한 인식 .....	55
[그림 3-12] 집단별 남녀갈등에 대한 인식 .....	56
[그림 3-13] 문화갈등에 대한 인식 .....	57
[그림 3-14] 집단별 문화갈등에 대한 인식 .....	57
[그림 3-15] 환경갈등에 대한 인식 .....	58
[그림 3-16] 집단별 환경갈등에 대한 인식 .....	59
[그림 3-17]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영역간 비교 .....	61
[그림 3-18]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갈등에 대한 인식(1순위)의 연도별 비교 .....	62
[그림 4- 1] 정부에 대한 신뢰도 .....	69
[그림 4- 2] 국회에 대한 신뢰도 .....	70
[그림 4- 3] 법원에 대한 신뢰도 .....	71
[그림 4- 4] 경찰에 대한 신뢰도 .....	71
[그림 4- 5] 언론에 대한 신뢰도 .....	72
[그림 4- 6]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	73
[그림 4- 7] 갈등 관리 주체에 대한 인식(1순위, 2순위) .....	73
[그림 4- 8] 갈등 관리 주체에 대한 인식(종합순위) .....	74
[그림 4- 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공기관 신뢰도의 표준편차 .....	77
[그림 4-10] 공공기관 신뢰도의 평균 값 변화 : 2010~2011/ 2011~2012 .....	78
[그림 4-11] 시기별 연령집단별 공공기관 신뢰도 변화 .....	79
[그림 4-12] 시기별 교육수준별 공공기관 신뢰도 변화 .....	80
[그림 4-13] 시기별 종교별 공공기관 신뢰도 변화 .....	80
[그림 4-14] 시기별 이념성향별 공공기관 신뢰도 변화 .....	80
[그림 4-15] 공공기관 신뢰도의 평균 값 변화 : 2010~2012 .....	82

[그림 4-16]	2010년~2012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변화 .....	83
[그림 4-1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인식 .....	85
[그림 4-18]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 .....	86
[그림 4-19]	준법정신에 대한 인식 .....	86
[그림 4-20]	나눔 및 자원봉사 참여 수준 .....	87
[그림 4-21]	노블레스 오블리제에 대한 인식 .....	88
[그림 4-22]	대한국민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한 인식 변화 .....	91
[그림 4-23]	경제사회적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 변화 .....	93
[그림 4-24]	타인의 준법정신에 대한 인식 변화 .....	95
[그림 6- 1]	주관적 귀속 계층 .....	110
[그림 6- 2]	소득수준별 주관적 귀속 계층 분포 .....	111
[그림 6- 3]	10년 후 귀속 계층 기대 인식 .....	112
[그림 6- 4]	계층 이동에 대한 전망 .....	112

## 요약

### 제 I 장 서론

#### □ 조사 배경

- 사회통합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고, 사회통합을 위한 장·단기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사회통합 의식조사를 실시

####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의식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2012년 현재 한국사회 구성원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의식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이념적 성향과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인식
  - －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 공공기관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적 귀속감, 사회적 참여
  - － 사회통합의 주요 정책과제와 담당 기관에 대한 인식
  - － 주관적 귀속 계층과 계층이동에 대한 기대

#### □ 연구의 한계

- 다수 문항의 경우 2010년부터 3년간 반복적으로 조사에 포함되었으나, 조사 방법상의 차이로 인해 조사 결과의 직접적 비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시계열 비교는 문항에 대한 응답의 기본 분포에 대한 비교에 원칙적으로 국한하고, 경우에 따라 집단별 응답분포의 비교를 참고적으로 제시

## 제2장 사회통합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 □ 이념적 성향

- 보수라는 응답(32.7%)이 진보라는 응답(28.2%) 보다 높게 나타남.
  - 2011년에 비해 진보는 증가, 보수는 감소(각각 26.8%, 35.3%)
  - 보수: 중도: 진보의 비율이 대략 3: 4: 3이라는 기존의 조사 결과와 유사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 성향 강화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영남이 가장 보수적, 호남이 가장 진보적
    - 소득구간에서는 월 400-500만원의 소득을 얻는 계층이 가장 진보적이고 200만원 이하 계층이 가장 보수적

### □ 주요쟁점에 대한 인식

- 성장과 분배
  - 성장 우선이라는 응답(34.0%)이 분배 우선이라는 응답(32.1%) 높게 나타남.
  - 2011년 대비 분배우선이라는 응답은 감소, 성장 우선은 증가(각각 40.6%, 24.3%였음)
    - 이념적 성향에 대해 ‘보수적 이념성향’ 응답자에서는 성장 우선이, ‘진보적 성향’ 응답자에서는 분배 우선이란 응답의 성향이 강함.
- 북한에 대한 인식
  - 북한은 우리의 동반자라는 명제에 대해 응답자의 6.8%가 매우 그렇다, 23.2%가 그런 편이라고 응답함.
  - 북한은 우리의 동반자(30.3%)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44.5%)라는 응답보다 낮게 나타남.
    - 2011년 대비 동반자라는 응답은 증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감소(각각 16.7%, 50.8%였음).
    -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이념적 성향과 북한에 대한 태도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명제에 대해 그런 편이다(44.1%) > 보통이다(26.4%) 순으로 나타남.
- 도움이 된다는 응답(56.5%)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7.2%)에 비해 세배 이상 많음.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에서, 소득구간별로는 월 4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의 고소득층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기여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강함

##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명제에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76.8%)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8.1%)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격차 확대에 대해 더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 대에서 가장 점수가 높음
  - 지역별로는 영남과 호남지역이 지역간 격차 확대에 대해 강한 동의를 보였으며, 반대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음.
  - 지역간 격차에 대한 인식은 이념적 성향과도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여, 진보적 성향에서 격차 확대를 더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이념적 성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

## ○ 이념적 성향과의 상관관계

- 보수적 성향에 가까울수록 타 쟁점에 대한 인식에서도 낮은 점수를 보임
- 성장-분배의 우선성에 대한 인식과 외국인 근로자의 기여에 대한 인식 사이에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측되지 않을 뿐, 여타 다른 쟁점에 대한 인식들 사이에도 유의미한 (+)의 상관관계가 관측됨.

### 제3장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

#### □ 영역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 계층갈등

- － 빈곤층과 부유층 사이의 계층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82%가 넘었으며,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
- 2011년 대비 심하다는 응답은 증가,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감소(각각 75.7%, 5.7%였음)
- 대졸 이상의 학력에서 계층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며, 소득구 간별로는 200~300만원 구간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계층갈등에 대한 인식은 이념적 성향과도 상관관계를 보여, 보수에 비해 진보가 갈등을 더 심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노사갈등

- － 심하다는 응답(63.7%)이 심하지 않다는 응답(4.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보통이라는 응답도 약 1/3가량 존재함.
- 2011년 대비 심하다와 심하지 않다 모두 감소(2011년에는 각각 74.5%, 5.2%)하였고 보통이라는 응답 증가함.
- 이념적 성향을 기준으로 볼 경우 보수와 중도가 거의 비슷한 반면 진보적 성향에서 노사 갈등의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 ○ 이념갈등

- － 이념 갈등은 심하다는 응답이 63.8%로 다수인 반면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4.5%로 소수에 불과함.
- 2011년 대비 심하다는 응답은 증가, 심하지 않다는 감소함.
- 고학력일수록 이념갈등에 대해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음.

##### ○ 지역갈등

- － 서울과 지방의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56.1%로 심하지 않다는 응답(11.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



- 2011년 대비 심하다는 응답은 다소 증가,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감소하였음.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가장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40대에서 가장 덜 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강원 및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 세대갈등

- 세대간 갈등이 심하다(56.1%), 심하지 않다(8.9%)로 심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임.
- 2011대비 심하다는 응답 증가,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감소
- 남성에 비해 여성이 세대간 갈등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음.
-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 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연령효과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음.

#### ○ 남녀갈등

- 남녀간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32.2%로 심하지 않다는 응답(18.3%)에 비해 많음
- 2011대비 심하다는 응답은 증가,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감소함
- 남녀간 갈등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중졸 이하의 학력집단이 고졸 이상의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 문화갈등

- 문화적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36.9%)은 심하지 않다는 응답(17.2%)에 비해 약 두배 이상의 비율을 보임.
- 2011년 대비 심하다, 심하지 않다 모두 감소
-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문화적 갈등의 심각성을 더 느끼고 있음.

○ 환경갈등

- 개발과 환경 보존을 둘러싼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51.6%)이 심하지 않다는 응답(9.4%)에 비해 훨씬 많음.
- 작년 대비 심하다는 응답 증가, 심하지 않다는 응답 감소
- 5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 남성의 평균은 3.47인 반면 여성은 그보다 높은 3.62를 보임.

□ 시급히 대응해야 할 갈등

○ 1순위는 계층, 노사, 지역갈등의 순

- 특히 계층갈등은 다음 순위인 노사갈등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응답을 보임
- 세대, 남녀, 문화, 환경갈등 등은 응답 비율이 10% 미만임.

○ 2순위는 노사, 계층, 지역, 이념 갈등의 순

- 1, 2순위를 구분하지 않고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 계층갈등이 57.7%로 1순위로 나타났으며, 2위는 노사갈등(37.0%)임.

- 종합 순위에서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것은 남녀갈등(6.1%)임.

○ 지난 3개년 간 모두 계층갈등이 계속하여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

- 2012년의 계층갈등 응답비율은 2011년보다는 낮아졌으나, 2010년보다는 증가함.

## 제4장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

□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변화

○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불신(46.0%)이 신뢰(15.8%)보다 높게 나타남.

- 2010년 대비 신뢰수준은 다소 감소(19.6%→15.8%)하고 불신수준이 다소 증가(41.8%→46.0%)

○ 국회는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신뢰(5.6%)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2.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2010년 대비 국회에 대한 신뢰는 다른 기관의 신뢰가 감소한 것에

반해 다소 증가(3.1%→5.6%)하였으며, 불신수준은 다소 감소(80.4%→72.8)

-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15.7%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44.4%)보다 낮음.
  - 2010년과 비교하여 신뢰수준은 다소 감소(16.8%→15.7%)하고, 불신 수준이 다소 증가(40.7%→44.4%)
- 경찰은 금융기관과 더불어 20% 이상의 다소 양호한 신뢰수준을 보임.
  - 그러나 은행 또한 신뢰하지 않는다(34.5%)가 신뢰한다(22.1%)보다 높게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신뢰수준은 다소 감소(25.7%→22.1%)하였으며, 불신 수준은 다소 증가(29.1%→34.5%)
- 언론(신문/방송)에 대해 신뢰한다(16.8%)가 신뢰하지 않는다(45.6%)보다 낮게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면 신뢰수준은 다소 감소(17.7%→16.8%)하였으며, 불신 수준이 다소 증가(42.9%→45.6%)
- 금융기관(은행)에 대한 신뢰도는 28.5%로 6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신뢰수준을 보이며,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신뢰한다(28.5%)가 신뢰하지 않는다 (26.0%)보다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이는 2010년과 비교하면 신뢰 수준이 다소 감소(35%→28.5%)하였으며, 불신수준은 다소 증가(22.9%→26.0%)
- 위의 6개 공공기관 중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주체로서 가장 적합한 기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순위는 정부, 언론, 국회의 순으로 나타나고, 2순위는 국회, 언론, 정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사회적 결속력의 변화

-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61.7%)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 (8.3%)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은 2010년 대비 2011년 다소 감소(65%→

54.6%)하였으나, 2012년 다시 다소 증가

○ 경제사회적 기회균등에 대한 태도

— 기회균등이 보장된다(16.8%)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45.4%)는 응답보다 낮게 나타남.

- 2010년 대비 2011년의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 모두 다소 감소(각각 48.3%→42.2%, 18.4%→14.1%)

○ 시민들의 준법정신에 대한 태도

— 준법정신에 대한 질문에도 법을 잘 지킨다(28.0%)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31.7%)는 응답보다 낮음.

- 2010년 대비 2011년의 긍정적 응답은 감소(32.7%→23.1%)하였다가 다시 2012년에 증가

○ 사회적 나눔 활동

— 여전히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4%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 1~2회 이상 나눔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47.7%로 나타나 전년(31.0%)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 부유층과 기업의 나눔 활동에 대한 인식

— 이들의 기부 및 나눔 활동이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77.8%로 압도적이었으나, 그 비율은 전년 대비 큰 변화 없음.

## 제5장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 □ 사회통합의 전제조건

○ 사회통합 강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경제적 약자 배려(26.9%) > 기회균등(25.8%) > 시민의식(20.2%) 순으로 나타남.

—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에 대해 이념적 성향이나 지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로 응답분포의 차이가 나타남.

- 남성은 여성에 비해 법치주의의 정립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으며, 상대적

으로 여성에서 약자배려나 시민의식, 관용 등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음

- 50대 이상에서는 높은 연령층에서는 약자배려가, 40대 이하에서는 기회균등이 가장 응답비율이 높음.
- 학력별로 집단을 구분할 때에도 중졸 이하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대졸 이상에서는 기회균등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 사회통합성 강화의 중심 기관

- 사회통합성 강화를 위해(또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응답함.
  - 1순위는 정부(65.2%)> 시민단체(10.1%) > 정당(8.4%)의 순으로 나타나고, 2순위는 정당(20.8%) > 기업(20.0%) > 시민단체(19.8%) 순으로 나타남.
  -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의 중심기관으로 정부를 압도적 다수가 지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 있음.
  - 이는 여전히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공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국민들이 기대한 것을 의미함.

## 제6장 계층의식과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

#### □ 주관적 계층의식

- 주관적으로 느끼는 계층 의식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중간층(41.9%) > 중하층(27.0%) > 저소득층(19.2%)의 순으로 나타남.
  - 중하층과 저소득층을 합할 경우 약 46.1%로 이는 2010년의 48.0%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임.
  - 대신 2010년에 비해 중상층의 비율이 다소 높아짐(9.2%에서 11.4%로 증가)

#### □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

- 10년 후의 귀속계층에 대한 예상에서 중간층이 가장 많은 점(40.2%)은 현재

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동일함.

— 그러나 10년 후에 대해서는 중상층일 것(22.3%)이라는 응답이 중하층일 것(19.9%)이라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미래의 계층상승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임.

- 현재와 10년 후의 계층을 비교할 때 계층 유지 예상(52.5%) > 상승 기대(34.9%) > 하락 전망(12.7%) 순으로 나타남.
- 계층 지위 유지 기대 : 상위층 > 중상층 순으로 높음.
- 계층하락 기대 : 상위층과 중상층에서 거의 비슷함.

○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그리고 이념적 성향별 계층이동 기대에 대한 차이 발견됨.

- 성별별 : 계층 상승 기대 - 남성 > 여성
- 연령별 : 계층 상승 기대 - 저연령 > 고연령
- 학력별 : 계층 상승 기대 - 고학력층 > 저학력층
- 이념적 성향별 : 진보적 성향의 집단에서 계층상승의 기대가 눈에 띄게 높음.

## 제7장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영역의 경우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 바, 갈등의 해소와 사회통합의 제고는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계층갈등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인식이 3년째 가장 많은 응답을 보임. 따라서 소득분배의 개선과 사회안전망의 강화 등 계층 간 격차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 요구될 것임.

□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인식과 이념적 성향 사이의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며, 이념적 성향의 연령대별, 지역별, 학력별 차이가 나타남.

○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연령효과가 강하다는 점임.

이외에 학력이나 지역 효과는 부분적으로 나타남.

- 이념적 성향에 대해 강한 연령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은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에 많은 것을 시사함.
  - 연령효과는 세대간 갈등으로 표출되는 정도에 비해 이념적 성향을 통해 여타 사회적 쟁점이나 갈등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띠고 있음.
  - 갈등에 대한 인식이 개개인의 삶의 객관적 조건과 동시에 집단 내의 간접경험과 집단에 대한 귀속 의식에 의해 영향 받을 가능성을 고려한 접근 필요
- 국민으로서의 귀속감, 사회통합 제고에 대한 정부 역할의 기대, 계층이동에 대한 낙관적 전망 우세 등 긍정적 측면도 발견되므로,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정책 구상 시 이러한 긍정적 자원들을 활용할 필요
- 특히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계층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요컨대 계층간 격차와 갈등 해소는 민간(시민단체, 노동조합, 개인, 기업 등)보다 정책이나 입법 등 공적 영역을 통해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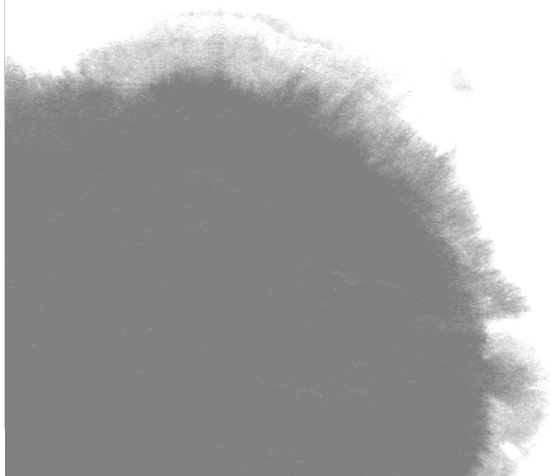
\*주요용어: 사회통합, 사회갈등, 사회적 귀속감





# 1장

## 서론





# 제1장 서론

## 제1 절 연구의 배경

### □ 조사 배경

- 사회통합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고, 사회통합을 위한 장·단기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사회통합 의식조사를 실시
  - － 우리사회의 계층·이념·지역·세대 간 갈등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양상이 일부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의식조사를 통해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국민들의 사회통합의식이 시기별로, 집단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파악을 통해 맞춤형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통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본 조사는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0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던 조사로써, 각 년도 조사의 특성에 따라 조사 방법과 문항에 다소 차이가 있음.

### □ 2012년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
  - － RDD(Random Digit Dialing)방식이 적용된 CATI 시스템 활용

- 유선등재 : RDD-유선 : RDD-무선 = 50 : 30 : 20 비율 적용
- 표본 추출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다단계층화추출법  
(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
- 조사 기간 : 2012. 9. 10 ~ 9. 24
- 조사 기관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주요 조사 내용(2010년 이후 문항 유지)
  -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 영역별 사회적 갈등의 심각성, 주요 갈등영역에 대한 인식
  - 사회적 귀속감, 사회 참여,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 사회통합의 전제조건, 사회통합을 위한 중심기관 등
- 연도별 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음에 따라 조사 결과의 시계열 비교시 유의해야 할 것임.
  - 2010년 : 전화조사, 2,000명(유선)
  - 2011년 : 면접조사, 1,000명(복지의식조사와 병행)
- 조사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분포는 아래 <표 1-1>과 같음.

〈표 1-1〉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분포

구분		〈전 체〉	
		빈도	%
<전 체>		(2000)	100.0
성별	남성	(983)	49.2
	여성	(1017)	50.9
연령별	20대	(351)	17.6
	30대	(405)	20.3
	40대	(456)	22.8
	50대	(369)	18.5
	60대 이상	(419)	21.0
지역별	서울	(422)	21.1
	부산	(146)	7.3
	대구	(100)	5.0
	인천	(109)	5.5
	광주	(60)	3.0
	대전	(64)	3.2
	울산	(43)	2.2
	경기	(440)	22.0
	강원	(61)	3.1
	충북	(65)	3.3
	충남	(77)	3.9
	전북	(77)	3.9
	전남	(73)	3.7
	경북	(106)	5.3
	경남	(132)	6.6
	제주	(25)	1.3
혼인상태별	유배우	(1344)	67.2
	사별	(86)	4.3
	이혼/별거	(29)	1.5
	미혼	(531)	26.6
	거절	(10)	0.5
학력별	중졸 이하	(306)	15.3
	고졸	(673)	33.7
	대졸 이상	(1004)	50.2
	무응답	(17)	0.9

〈표 1-1〉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분포(계속)

구분		〈전 체〉	
		빈도	%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89)	4.5
	자영업	(359)	18.0
	블루칼라(노동직)	(229)	11.5
	화이트칼라(사무직)	(413)	20.7
	가정주부	(488)	24.4
	학생	(193)	9.7
	무직/기타	(229)	11.5
종교별	무교	(887)	44.4
	불교	(390)	19.5
	기독교	(491)	24.6
	천주교	(210)	10.5
	기타	(22)	1.1
월 평균 가구소득별	100만원 이하	(202)	10.1
	101~200만원 이하	(274)	13.7
	201~300만원 이하	(371)	18.6
	301~400만원 이하	(404)	20.2
	401~500만원 이하	(230)	11.5
	501~600만원 이하	(179)	9.0
	601만원 이상	(197)	9.9
	무응답	(143)	7.2

## 제2절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 한국종합사회조사

#### ○ 조사 목적

-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는 한국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기초통계 원자료 생산 및 확산을 위해 매년 시행함.
-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서 1972년 최초로 창안되어 지난 39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국제비교를 위한 종합사회조사(GSS)의 한국판

○ 조사 시기 : 2003년 제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0년 8차 조사 수행

○ 조사 기관 : 성균관대학교 서버이리서치센터

## ○ 조사 대상

##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의 크기는 제1,2,3차 조사 2,000이었으나 표본오차를 줄이고 유효 표본을 늘리고자 제3차부터 2,500으로 증대(제8차 유효표본수는 1,576)

## ○ 조사 방법 : 면접조사

## ○ 조사 내용

- － 정치성향,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 투표행위, 한국 정치에 대한 전망, 주변국에 대한 호오도,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북한에 대한 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 주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소득수준에 대한 평가 및 가계 전망, 계층 귀속감 등이 포함됨.

## □ 한국복지패널조사(복지인식 부가조사)

## ○ 조사 목적

- －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 등의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 제고하고,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 복지수급실태,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

## ○ 조사 시기

- － 2006년 제1차 복지패널자료 구축을 시작으로 매년 수행되며, 3년에 한번 시행되는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2007년, 2010년 수행

## ○ 조사 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조사 대상

-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가구, 표본가구에 속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제외한 15세 이상 가구원,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
- 패널 원표본 7,072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 조사’를 이용하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는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

-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부가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표본 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 2,366명을 대상으로 조사(2010년 2,132명 완료)

○ 조사 방법 : 면접조사

○ 조사 내용

-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사회계층과 소득분배, 미래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계층 구조,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관한 의견, 복지 운영 전달체계에 대한 의견, 복지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 정치참여와 성향 등이 포함됨.

#### □ 공생발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 조사 목적

- 분배정의에 기반하고 형평 사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민의 정치, 사회, 정부정책, 경제적 변화, 분의 배분, 공생 등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고자 함.

○ 조사 시기 : 2011년 10월 31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주간 실시

○ 조사 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 대상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500명을 조사

○ 조사 방법 : 면접조사

○ 조사 내용

- 정부의 역할,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담당분야, 정부의 책임 분야, 분야별 정부지출 증감에 대한 견해, 복지지출에 대한 견해, 부의 재분배 정도에 대한 견해, 빈곤층 지원정책에 대한 견해, 정치성향, 가구 경제, 공생 및 사회관계, 인생관 등이 포함.

#### □ 공정성·사회갈등·사회통합 실태조사

○ 조사 목적

- 우리 사회의 공정성·사회갈등·사회통합의 수준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에 관



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보다 통합적인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

- 조사 시기 : 2011년 7월 4일 ~ 7월 31일
- 조사 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조사 대상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0명
- 조사 방법 : 면접조사
- 조사 내용
  - 공정사회에 대한 인식, 소득분배와 공정성, 부정부패와 공정성, 사회갈등의 심각성 정도, 갈등의 대처방법, 갈등의 원인(계층, 지역, 노사, 세대, 교육, 이념, 환경 등), 집단별 갈등해소 노력(시민단체, 정부, 종교계, 교육계, 노동계 등), 사회통합 인식정도, 소수자 포용 인식정도, 이민자에 대한 인식,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신뢰 정도, 사회참여 정도 등 포함.

#### □ 선행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의의

- 사회통합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조사는 위의 조사 이외에도 관련 연구기관 및 언론사, 그리고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다수 수행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조사의 수행이 1회성에 그치거나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통합과 복지정책욕구 및 수요, 공정성 등의 관련 이슈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는 조사는 많지 않음.
- 특히 본 조사는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기관에서 동일문항으로 매해 수행되어 사회통합의 변화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조사연구와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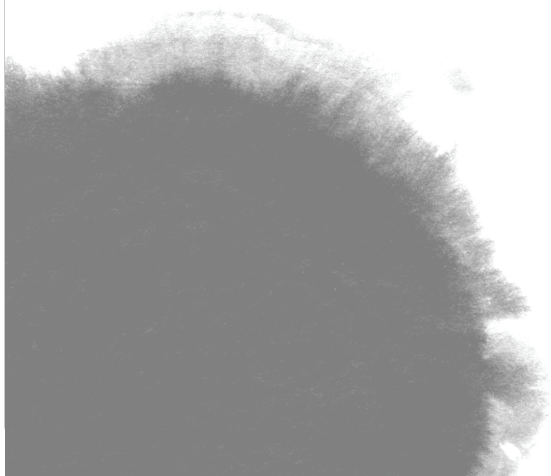
###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앞 절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수행된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2012년 현재 한국사회 구성원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의식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 설문문의 구성(부록 참조) 순서에 따라 연구의 구성 역시 다음과 주제에 대해 분석을 진행할 것임.
  - 2장 이념적 성향과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인식
  - 3장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4장 공공기관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적 귀속감, 사회적 참여
  - 5장 사회통합의 주요 정책과제와 담당 기관에 대한 인식
  - 6장 주관적 귀속 계층과 계층이동에 대한 기대
  - 마지막 7장은 조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임
- 각 장의 분석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기본적 빈도 분석과 함께, 주요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별로 집단 간 의식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할 것임
  - 또한 일부 조사문항의 경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타 문항의 응답과 교차분석을 시도할 것임.
  - 이 과정에서 각 문항별로 모름/또는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수 문항의 경우 2010년부터 3년간 반복적으로 조사에 포함되었으나, 앞서 언급한 조사 방법상의 차이로 인해 조사 결과의 직접적 비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시계열 비교는 문항에 대한 응답의 기본 분포에 대한 비교로 원칙적으로 국한하고자 하며, 경우에 따라 집단별 응답분포의 비교를 참고적으로 제시할 것임.

# 2장

## 사회통합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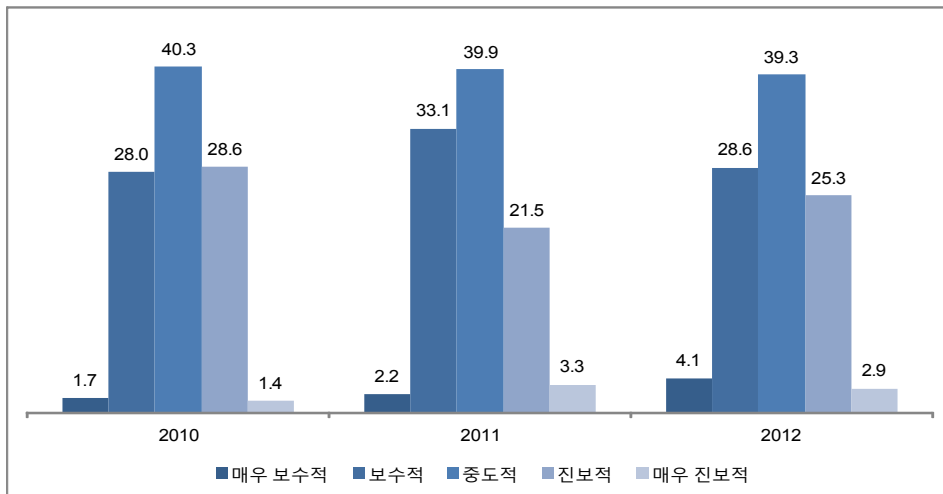


## 제2장 사회통합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 제1절 이념적 성향

- 응답자 스스로 이념적 성향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매우 보수적’부터 ‘매우 진보적’까지 5개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응답의 분포는 다음 [그림 2-1]의 가장 우측 그래프와 같음
  - 이념적 성향에 대해 보수라는 응답(32.7%)이 진보라는 응답(28.2%)보다 많음
    - － 2011년에 비해 진보는 증가, 보수는 감소(각각 26.8%, 35.3%)
    - － 보수:중도:진보의 비율이 대략 3:4:3이라는 기존의 조사 결과와 유사함

[그림 2-1] 이념적 성향



- 성별, 연령대, 학력, 지역, 소득구간대 별로 이념적 성향의 응답 분포를 분석한 결과(<표 2-1>) 집단 간 응답항목의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지역은 수도권, 충남, 영남, 호남, 강원 및 제주 등 6개 지역으로 구분
- 남성에서 매우 보수라는 응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매우 보수라는 응답의 비중은 10%를 넘어 평균의 두배 이상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음
- 매우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에서는 2.9%였으나 호남과 천주교에서 5% 넘게 나타남

〈표 2-1〉 집단별 이념적 성향의 분포

(단위: %)

구분		매우보수	약간보수	중도	약간진보	매우진보	$\chi^2$
성별	남성	5.6	27.0	38.1	25.9	3.5	16.763***
	여성	2.6	30.1	40.5	24.6	2.3	
연령	20대	1.7	20.8	39.3	36.2	2.0	149.396***
	30대	2.0	22.5	42.7	30.1	2.7	
	40대	1.1	28.7	37.5	29.0	3.7	
	50대	4.9	35.8	36.0	19.5	3.8	
	60대 이상	10.5	34.4	40.8	12.4	1.9	
학력	중졸이하	8.2	31.1	42.8	15.4	2.6	48.750***
	고졸	3.7	31.1	40.0	22.1	3.1	
	대졸	3.0	26.2	37.7	30.5	2.7	
	무응답	5.9	23.5	47.1	17.7	5.9	
지역	수도권	4.0	31.4	37.3	24.6	2.7	39.319***
	충청	3.9	29.6	37.9	24.8	3.9	
	영남	5.9	27.9	41.0	23.5	1.7	
	호남	0.0	20.0	43.8	31.0	5.2	
	강원, 제주	3.5	18.6	44.2	30.2	3.5	
종교	무종교	3.4	25.3	40.7	27.7	2.9	42.822***
	불교	4.6	30.8	39.7	22.6	2.3	
	기독교	4.5	32.2	36.9	24.4	2.0	
	천주교	2.9	31.0	38.1	22.4	5.7	
	기타	22.7	18.2	40.9	18.2	0.0	
월소득	200이하	6.3	30.0	43.1	18.1	2.5	44.719***
	300이하	4.9	28.8	40.2	25.1	1.1	
	400이하	2.5	28.2	40.4	26.0	3.0	
	600이하	2.4	27.6	35.5	30.3	4.2	
	600이상	5.1	30.0	32.0	28.9	4.1	
	무응답	2.1	24.5	42.7	28.0	2.8	
	계	81	571	786	505	57	2,000(명)

주: \*\*\*는 오차확률 1% 이내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 집단별로 이념적 성향을 비교하기 위해 매우 보수를 1, 매우 진보를 5로 환산하여 집단별로 평균값을 비교함([그림 2-2]).

○ 연령대별, 학력별, 지역별, 소득구간 등의 기준을 따를 경우 집단간에 확률오차 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성별로는 이념적 성향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측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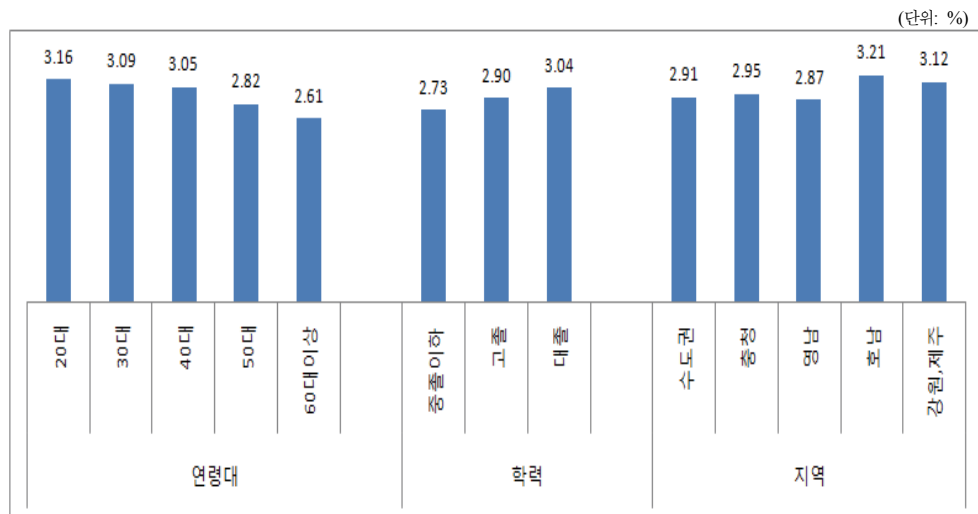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 성향 강함([그림 2-2]).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영남이 가장 보수적, 호남이 가장 진보적

— 종교적으로는 무종교와 천주교와 중도에 가깝고 기독교와 불교는 그에 점수가 낮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음.

— 소득구간에서는 월 400-500만원의 소득을 얻는 계층이 가장 진보적이고 200만원 이하 계층이 가장 보수적

[그림 2-2] 집단별 이념적 성향 비교(연령대, 학력,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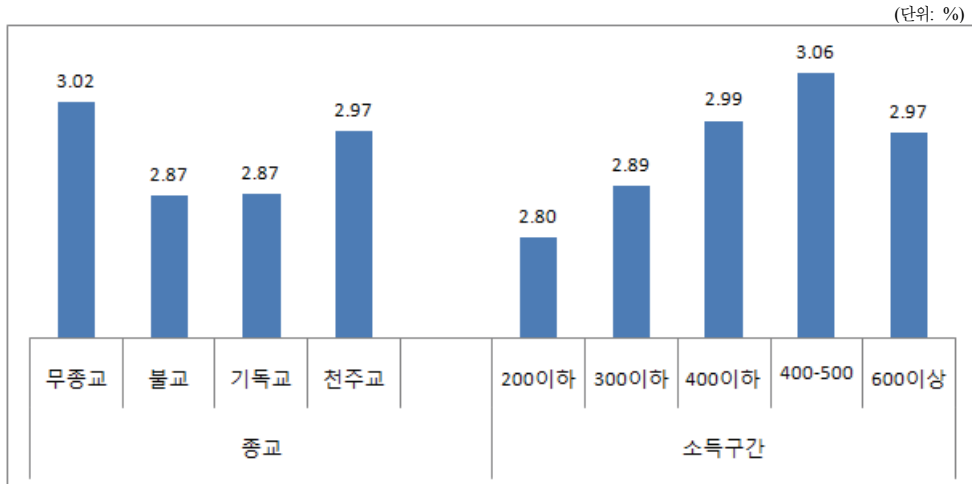


주: 1(매우 보수) ~ 5(매우 진보)

평균값의 차이는 1%의 오차 범위 내에서 유의함.



[그림 2-3] 집단별 이념적 성향 비교(종교, 소득구간별)



주: 1(매우 보수) ~ 5(매우 진보). 무응답은 제외함.  
 평균값의 차이는 1%의 오차 범위 내에서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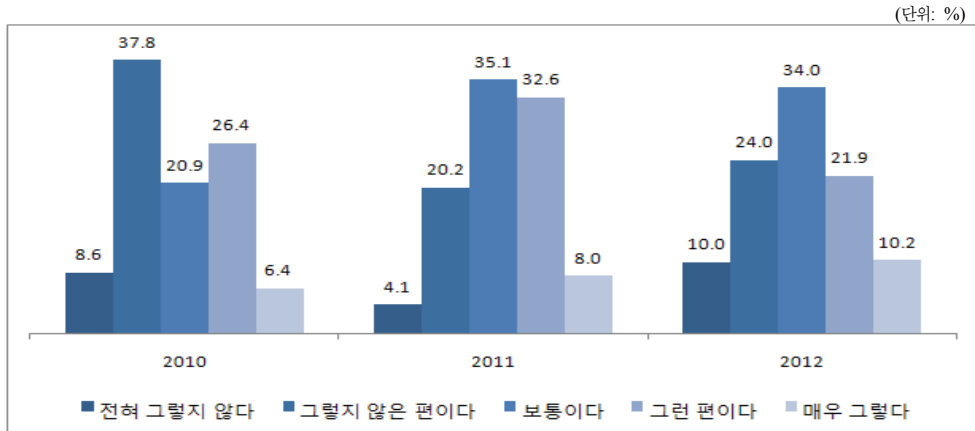
## 제2절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 1. 성장과 분배

□ 경제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이라는 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은 아래 [그림 2-4]의 가장 우측 그래프와 같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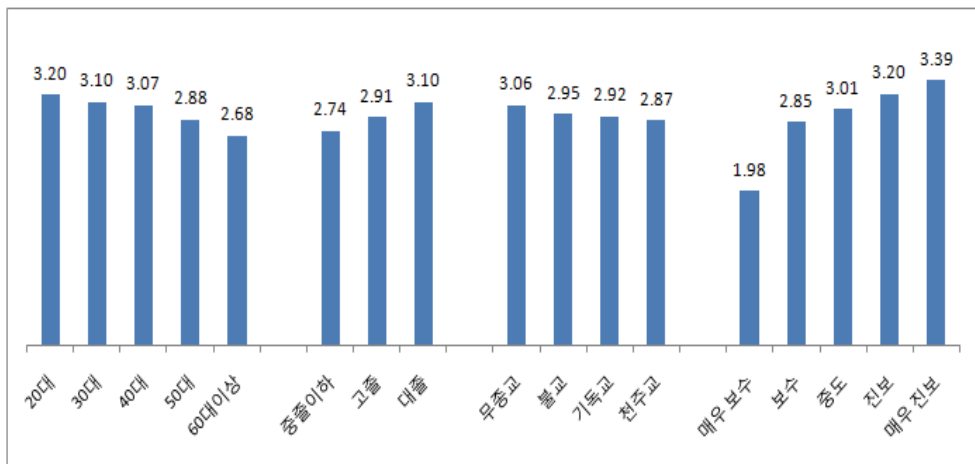
- 성장 우선이라는 응답(34.0%)이 분배 우선이라는 응답(32.1%)보다 많음
- 2011년 대비 분배우선이라는 응답은 감소, 성장 우선은 증가(각각 40.6%, 24.3%였음)

[그림 2-4] 경제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이다'에 대한 응답 분포



- 응답을 연속값으로 간주하여 집단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연령대가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분배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그림 2-5]).
- 종교는 무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의 순으로 성장우선의 인식이 강함.
- 성별, 지역별, 소득구간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측되지 않음.
- 이념적 성향에 대해 ‘보수적 이념성향’ 응답자에서는 성장 우선이, ‘진보적 성향’ 응답자에서는 분배 우선이란 응답의 성향이 강함.

[그림 2-5] 집단별 성장과 분배의 우선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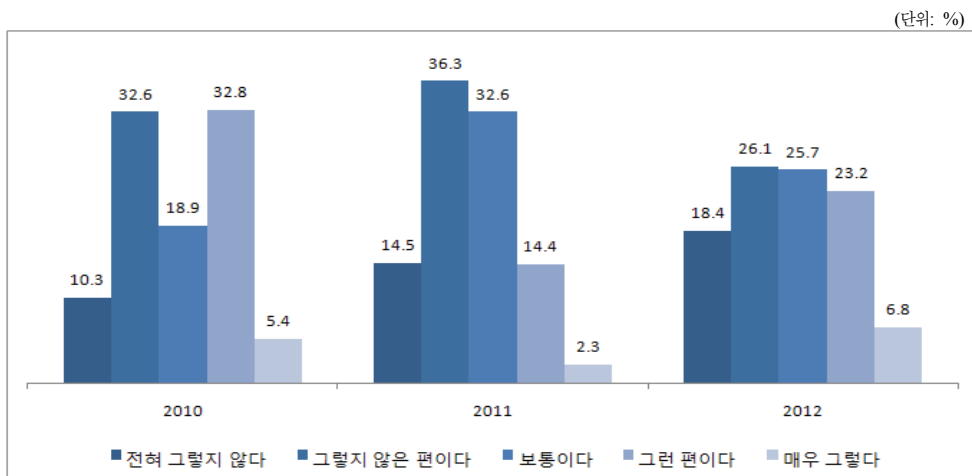
주: 1(성장우선) ~ 5(분배우선). 무응답은 제외함

평균값의 차이는 종교는 5%의 범위에서, 나머지 집단은 1%의 오차 범위 내에서 유의함.

## 2. 북한에 대한 인식

- 북한은 우리의 동반자라는 명제에 얼마나 동의하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6.8%가 매우 그렇다, 23.2%가 그런 편이라고 응답함([그림 2-6])
  - 북한은 우리의 동반자다(30.3%)라는 응답보다는 그렇지 않다(44.5%)는 응답이 많음.
  - 2011년 대비 동반자라는 응답은 증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감소(각각 16.7%, 50.8%였음).

[그림 2-6] 북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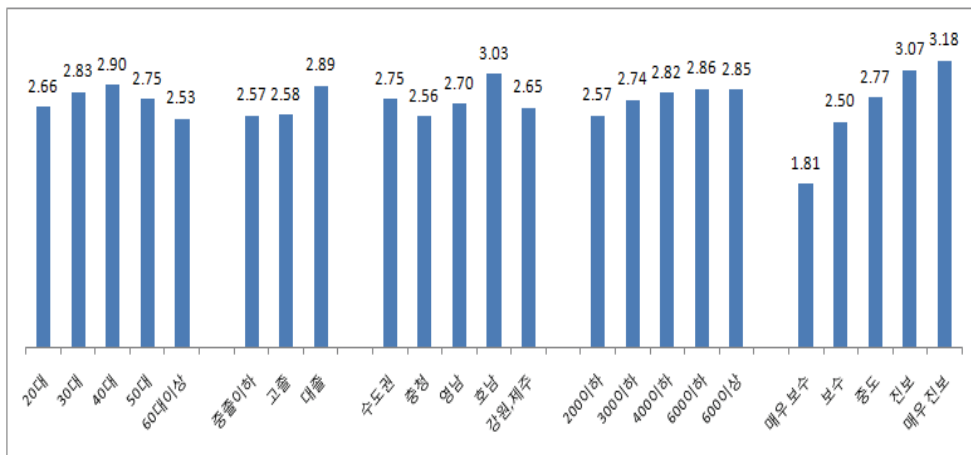


- 북한을 동반자로 보는 인식에서도 집단별 차이가 관측됨([그림 2-7]).
  - 연령대별로 볼 때, 북한이 동반자가 아니라는 인식은 60대 이상에서 강하고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덜함.
  - 학력별로 중졸 이하의 저학력에서, 소득수준으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북한을 동반자가 아니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남.
  - 지역별로는 호남이 유일하게 ‘보통이다’라는 인식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남.
  -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이념적 성향과 북한에 대한 태도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이 이념적 성향이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북한을 동반자로 보는가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보다’ 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매우 진보라는 응답자의 경우도 북한에 대한 인식은 중도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7] 집단별 북한에 대한 인식 비교



주: 1(전혀 그렇지 않다(동반자 아니다)) ~ 5(매우 그렇다). 무응답은 제외함  
평균값의 차이는 1%의 오차 범위 내에서 유의함.

### 3.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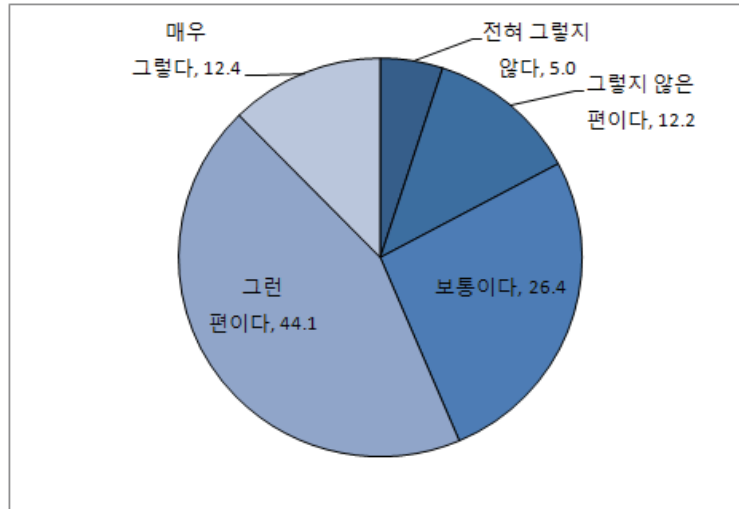
□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갖는 구성원과의 갈등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2012년 조사에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함.

○ 응답의 분포는 아래의 [그림 2-8]과 같음.

- 그런 편이다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통이다(26.4%)의 순임.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로 가장 낮았음.

-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56.5%)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7.2%)에 비해 세배 이상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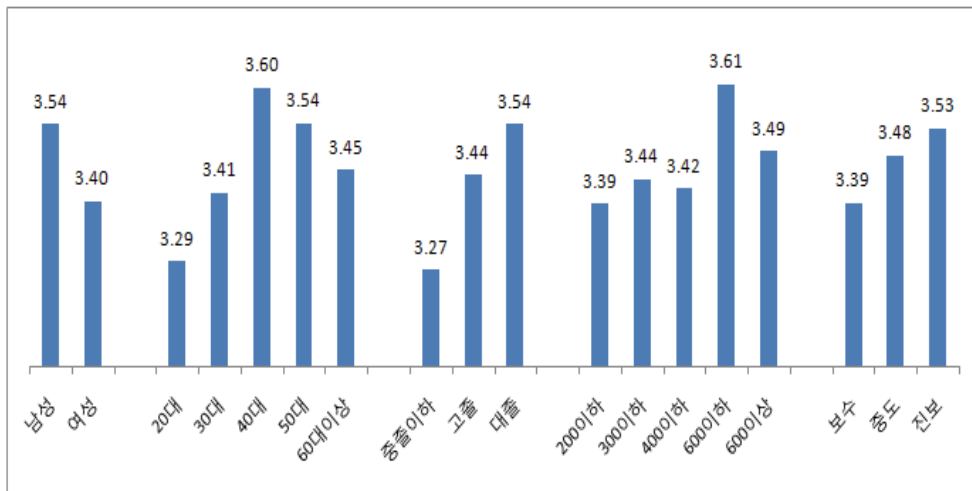
[그림 2-8]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에 대한 응답 분포



- 전혀 그렇지 않다는 1,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연속값으로 간주하여 집단간 평균 값을 비교한 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측됨.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함.
  -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긍정적 인식이 가장 강했으며 20대에서 상대적으로 약함.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에서, 소득구간별로는 월 4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의 고소득층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기여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강함.
  - 지역, 종교 등에 따른 집단구분에서는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이념적 성향에 따라 5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3 집단(보수, 중도, 진보)로 구분했을 때, 진보적 성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더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남.

[그림 2-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의 집단별 비교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도움이 되지 않는다) ~ 5. 매우 그렇다.

무응답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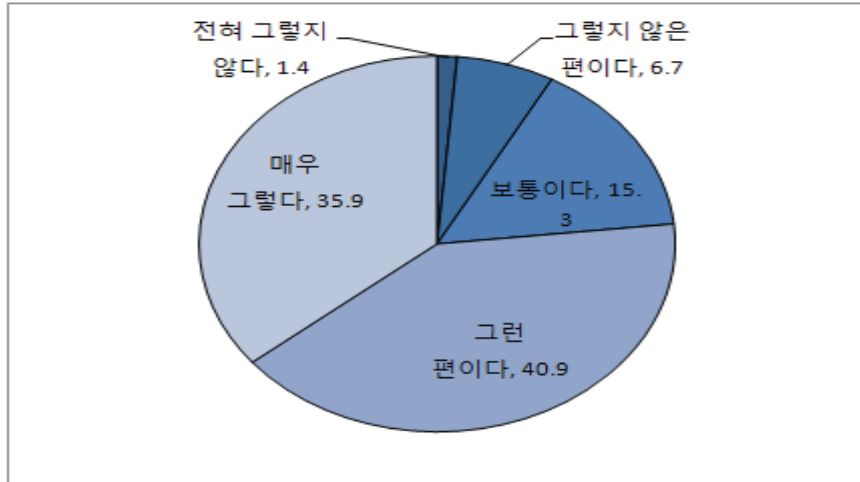
소득수준별은 5%, 이념적 성향은 10%, 나머지 구분은 1%의 오차범위 내에서 유의함.

####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 지역간 갈등의 배경이 되는 지역간 격차의 실태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명제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문함(2012년 신규)

- 이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그림 2-10]과 같이 그런 편이다가 4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이 매우 그렇다(35.9%)임.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76.8%)가 그렇지 않다(8.1%)는 응답보다 높음.

[그림 2-10]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확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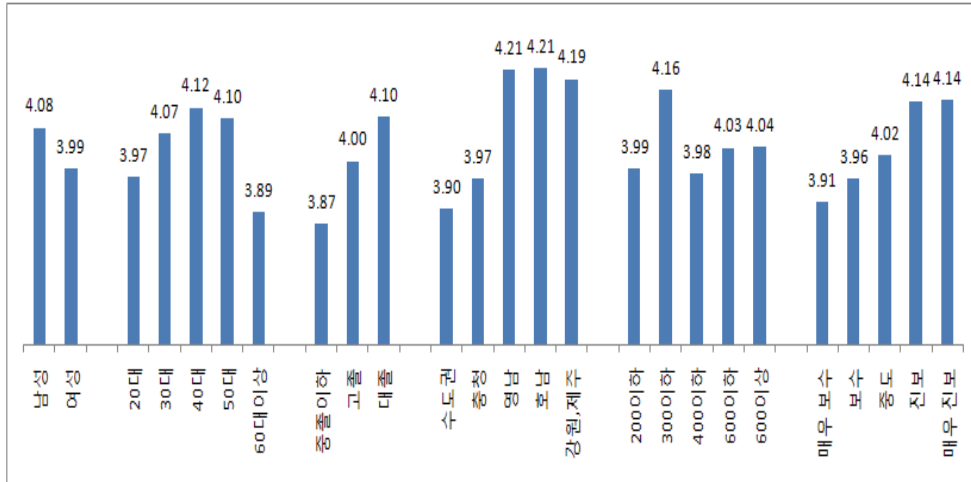


□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확대에 해단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1,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5점으로 하여 연속값으로 간주 한 후,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함.

○ 대부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래 [그림 2-11]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정도에 대해서는 집단 간 인식의 차가 나타남.

-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격차 확대에 대해 더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에서는 40대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음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대에서 가장 점수가 높음.
- 지역별로는 영남과 호남지역이 지역간 격차 확대에 대해 강한 동의를 보였으며, 반대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음.
- 지역간 격차에 대한 인식은 이념적 성향과도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여, 진보적 성향에서 격차 확대를 더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확대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확대되지 않는다) ~ 5. 매우 그렇다. 무응답은 제외함  
 소득수준별은 10%, 이념적 성향은 5%, 나머지 구분은 1%의 오차범위 내에서 유의함.

### 제3절 이념적 성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

#### 1. 이념적 성향과의 상관관계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들은 대부분 이념적 성향에 따른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념적 성향에 대해 매우 보수를 1로 하고 매우 진보를 5로 하는 연속값으로 간주
- 다른 쟁점에 대한 응답 역시 연속값으로 간주한 후 상관관계를 분석
  - 성장과 분배의 상대적 우선성: 성장우선 1~분배우선 5
  - 북한에 대한 동반자로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다 5
  - 외국인 근로자 기여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다 5
  - 수도권 비수도권간 격차 확대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다 5



- 이념적 성향은 다른 4가지 쟁점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미한 (+)의 상관관계를 보임.
- 즉 이념적 성향이 보수적 성향에 가까울수록 타 쟁점에 대한 인식에서도 낮은 점수를 보임.
  - 성장-분배의 우선성에 대한 인식과 외국인 근로자의 기여에 대한 인식 사이에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측되지 않을 뿐, 여타 다른 쟁점에 대한 인식들 사이에도 유의미한 (+)의 상관관계가 관측됨.

〈표 2-2〉 주요쟁점과 이념성향 상관관계

구분	이념성향	성장 vs. 분배	북한은 동반자	외국인 근로자의 기여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이념 성향	1	0.19598***	0.2351***	0.04687**	0.07187***
성장 vs. 분배		1	0.18772***	0.02128	0.12808***
북한은 동반자			1	0.1222***	0.09028***
외국인 근로자의 기여				1	0.12688***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1

주: \*\*, \*\*\*는 각각 오차범위 5%, 1%의 수준에서 유의성이 검증됨을 의미함.

## 2. 이념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이념적 성향이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과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념적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이념적 성향을 세 범주(보수, 중도, 진보)로 구분한 후, 그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을 시도함.
- 중도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성별, 연령대, 학력, 지역, 종교, 소득 등이 이념적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성별은 남성, 학력은 고졸, 지역은 수도권, 종교는 무종교, 소득구간은 월 300~400만원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함.

○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2-3>과 같음.

<표 2-3> 이념성향의 설명 요인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보수	-0.953†	0.192	-0.840†	0.198	-0.893†	0.221	-1.009†	0.216
	진보	-0.005	0.184	-0.023	0.192	-0.069	0.217	-0.040	0.210
여성	보수	-0.038	0.111	-0.037	0.112	-0.045	0.112	-0.079	0.114
	진보	-0.132	0.117	-0.132	0.117	-0.157	0.118	-0.160	0.119
연령대	보수	0.258†	0.048	0.273†	0.048	0.281†	0.049	0.261†	0.050
	진보	-0.142†	0.050	-0.143†	0.050	-0.137†	0.051	-0.137†	0.052
중졸이하	보수	-0.281	0.173	-0.267	0.174	-0.195	0.182	-0.194	0.181
	진보	-0.169	0.214	-0.178	0.214	-0.029	0.224	-0.031	0.224
대졸이상	보수	0.030	0.126	0.015	0.127	-0.030	0.131	-0.057	0.131
	진보	0.308*	0.131	0.316**	0.131	0.237*	0.134	0.227*	0.135
충청	보수			-0.088	0.195	-0.055	0.196		
	진보			0.147	0.203	0.188	0.205		
영남	보수			-0.194	0.133	-0.171	0.133		
	진보			-0.137	0.145	-0.104	0.146		
호남	보수			-0.728†	0.208	-0.695†	0.209		
	진보			0.256	0.185	0.312*	0.187		
강원 제주	보수			-0.723**	0.296	-0.686**	0.297		
	진보			0.066	0.273	0.136	0.275		
200이하	보수					-0.113	0.178	-0.170	0.177
	진보					-0.211	0.191	-0.186	0.190
2-300	보수					0.052	0.175	0.022	0.174
	진보					-0.062	0.181	-0.060	0.180
4-600	보수					0.071	0.174	0.068	0.174
	진보					0.302	0.172*	0.293*	0.171
600이상	보수					0.327	0.216	0.342	0.215
	진보					0.297	0.218	0.284	0.217
불교	보수							0.045	0.153
	진보							0.010	0.164
기독교	보수							0.246*	0.142
	진보							0.033	0.150
천주교	보수							0.146	0.196
	진보							0.054	0.205
Likelihood		65.4**		279.61**		954.04†		873.84†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먼저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 학력만을 고려한 모형 1에서는
  -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중도에 비해 보수적 성향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며, 진보적 성향일 확률은 유의미하게 낮아짐.
  - 대졸 이상일 경우 진보일 확률이 높아짐.
  -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음.
- 위의 모형 1에다 거주지역을 포함한 모형 2에서는
  - 연령대의 효과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남.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일 확률이 높고 진보일 확률은 낮음.
  - 대졸이상인 경우 진보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도 모형 1에서와 동일
  - 지역적으로는 호남일 경우, 그리고 강원 및 제주일 경우 보수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짐 보수일 가능성이 낮음.
- 모형 2에 다시 소득구간을 설명변수로 추가형 분석한 모형 3에서는
  - 연령대의 효과, 대졸 이상에서 진보적 성향의 증가는 이전 모형에서와 동일하게 나타남.
  - 지역적으로 호남일 경우 보수의 가능성이 낮으며 진보의 가능성이 높음.
  - 소득의 효과는 월 400~600만원을 얻는 집단에서만 나타나는데, 이 집단은 준거집단인 월 200~300만원 집단에 비해 진보적 성향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함.
- 모형4는 모형3에서 지역 변수 대신 종교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것임.
  - 연령대 효과, 대졸 이상에서의 진보적 성향 증가효과는 다른 모형에서와 동일
  - 월 400~600만원을 얻는 집단에서 진보적 성향일 확률이 높아지는 점도 모형 3과 동일함.
  - 종교의 영향은 기독교 신자인 경우 보수적 경향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 그밖에 다른 종교에서 다른 유의미한 경향성은 관측되지 않음.

## 제4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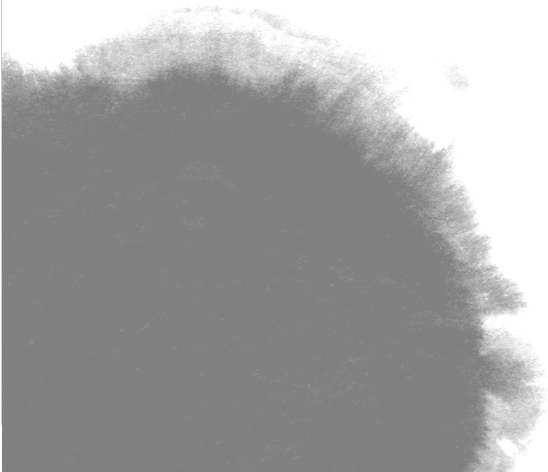
- 국민들이 스스로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보수가 진보에 비해 많았으나, 보수 : 중도 : 진보의 비율이 대체로 3: 4: 3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년도 조사와 같음.
- 성장과 분배의 우선성에 대한 의식은 성장우선이 분배우선보다 다소 많았으나, 크게 보아 성장우선, 보통, 분배우선이란 응답 비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음.
- 북한이 우리의 동반자라는 응답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반자라는 인식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함.
- 금년도 조사에서는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갈등의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하였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세배 이상 많은 약 57%로 나타남.
- 또한 금년도 조사에는 지역간 격차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고, 그 결과 심화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함(약 77%).
- 응답자 스스로 파악하는 이념적 성향은 다른 쟁점에 대한 응답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보수적 성향일수록 성장 위주라는 인식, 북한은 우리의 동반자가 아니라는 인식,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심화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음.

- 이와 같이 이념적 성향이 다른 쟁점에 대한 태도와 갖는 상관관계가 큰 바, 이념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음.
- 그 결과 연령효과가가 눈에 띄게 나타남. 즉 연령이 높을수록 스스로의 이념적 성향을 보수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 대졸자 이상일 경우 진보적일 성향이 높았으며, 기타 지역이나 소득수준, 종교적 배경도 부분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됨.



# 3장

##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







## 제3장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

### 제1 절 영역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1. 계층갈등

□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질문함.

○ 이 질문들은 2010년 조사부터 지속적으로 조사에 포함된 질문이며, 각 영역별로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1. 전혀 심하지 않다’ ~ ‘5. 매우 심한 편이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함.

□ 먼저, 계층간 갈등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다음 [그림 3-1]의 가장 우측과 같은 응답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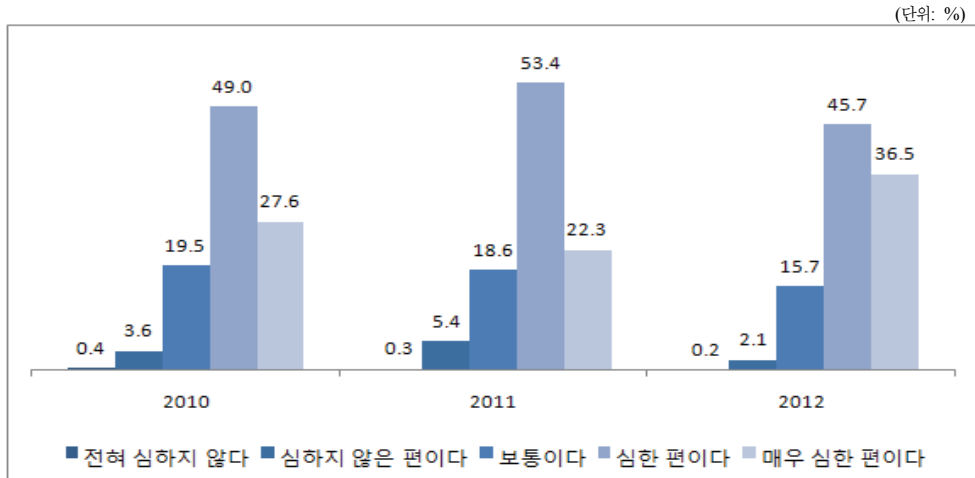
○ 계층간 갈등이 심한 편이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고, 다음 매우 심한 편이다(36.5%)임.

— 반면 심하지 않은 편이라는 2.1%, 전혀 심하지 않다는 0.2%로 응답비율이 매우 작았음.

○ 빈곤층과 부유층 사이의 계층갈등이 심하다(82.1%)는 응답의 비율이 82%가 넘었으며,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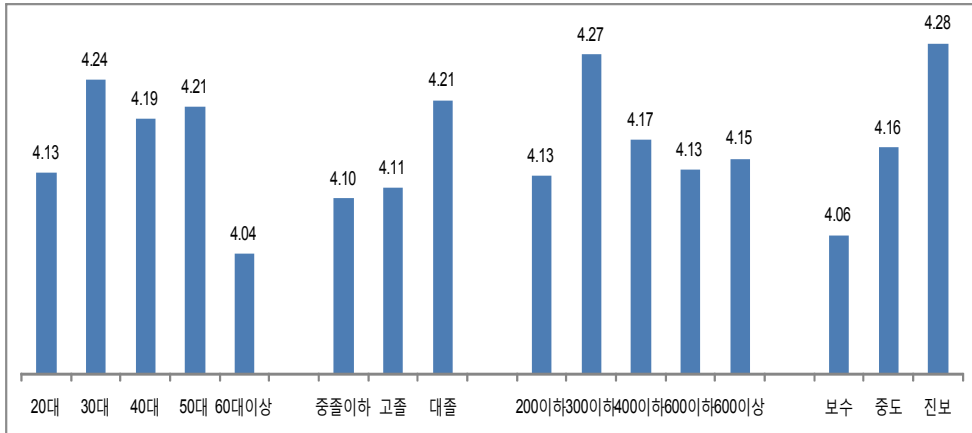
— 2011년 대비 심하다는 응답은 증가,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감소(각각 75.7%, 5.7%였음)

[그림 3-1] 계층갈등에 대한 인식



- 집단별로 계층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고령층과 저학력층에서 계층갈등의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연령대는 30대이고, 다음이 50대임.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평균적으로는 모든 연령대가 심한 편이다 이상의 응답을 보임.
- 대졸 이상의 학력에서 계층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며, 소득구간별로는 200~300만원 구간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지역별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계층갈등에 대한 인식은 이념적 성향과도 상관관계를 보여, 보수에 비해 진보가 갈등을 더 심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 집단별 계층갈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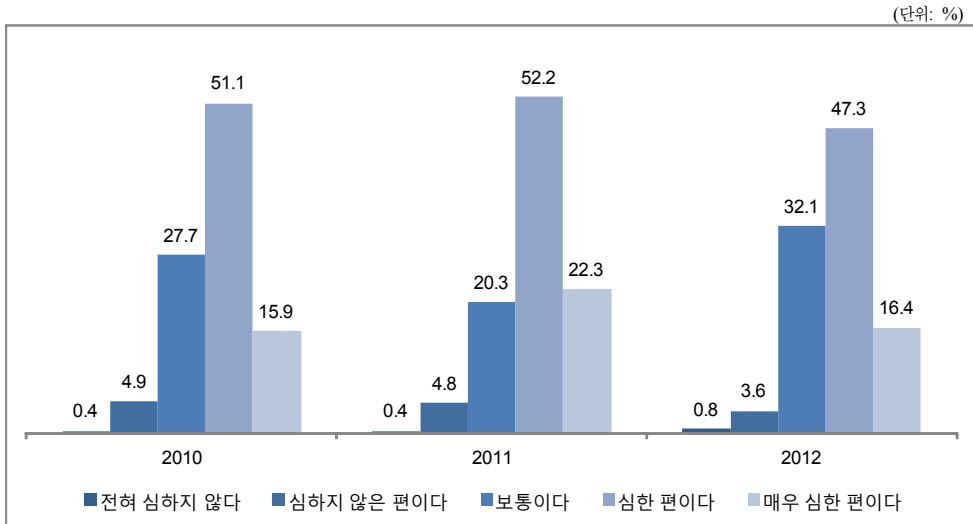
주: 1. 전혀 심하지 않다 ~ 5. 매우 심한 편이다.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소득수준별은 10%, 교육수준은 5%, 연령과 이념적 성향은 1%의 범위 내에서 유의함.

## 2. 노사갈등

□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노사갈등이 어느정도 심각한지에 대한 응답은 다음 [그림 3-3]의 우측 그래프와 같이 나타남.

- 갈등이 심한편이다가 4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이 매우 심한편이다(16.4%)임.
- 심하다는 응답(63.7%)이 심하지 않다는 응답(4.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보통이라는 응답도 약 1/3가량 존재함.
- 2011년 대비 심하다와 심하지 않다 모두 감소(2011년에는 각각 74.5%, 5.2%)하였고 보통이라는 응답 증가함.

[그림 3-3] 노사갈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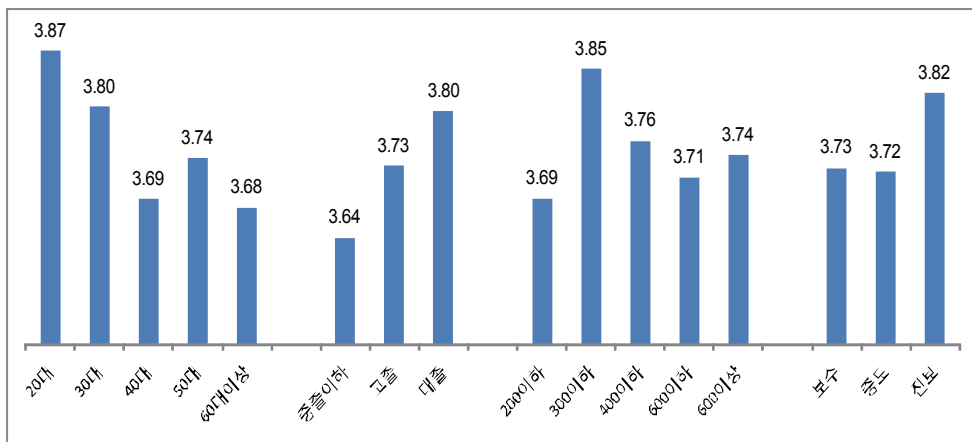


□ 노사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1~5점 구간을 연속값으로 간주하여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아래의 [그림 3-4]와 같이 나타난.

-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에서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약한 것은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40대에서도 60대 이상과 거의 같은 수준을 보임.
  - － 계층갈등과는 달리 노사갈등에서는 20대가 느끼는 심각성이 매우 크게 나타남.
  -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에서 심각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소득수준별로는 월 2-300만원 구간에서 강하게 느낌
- 이념적 성향을 기준으로 볼 경우 보수와 중도가 거의 비슷한 반면 진보적 성향에서 노사 갈등의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 한편 성별이나 직업별 구분에 따른 심각성의 차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 이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농어업 종사자를 제외한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이러한 점은 노사갈등에 대한 인식이 실제 객관적인 직업적 위치에 근거하지 않음을 의미.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20대가 느끼는 갈등의 심각성이 크다는 점은 노사갈등의 정도가 직업보다는 동일 직업 내에서 종사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그림 3-4] 집단별 노사갈등에 대한 인식



주: 1. 전혀 심하지 않다 ~ 5. 매우 심한 편이다.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소득수준과 이념적 성향별 집단간 차이는 5%, 연령과 교육수준은 1%의 범위 내에서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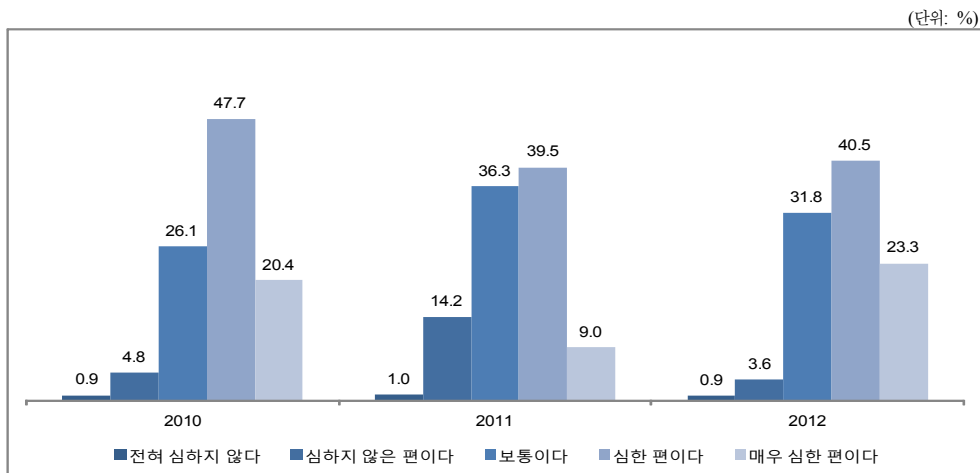
### 3. 이념갈등

□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념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아래 [그림 3-5]의 우측 그래프와 같이 응답 분포가 나타남.

- 이념갈등이 심한 편이다가 40.5%로 가장 높고, 다음이 보통이다(31.8%)의 순임.
- 이념 갈등은 심하다는 응답이 63.8%로 다수인 반면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4.5%로 소수에 불과함.
- 2011년 대비 심하다는 응답은 증가,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감소함.

- 2011년은 심하다와 심하지 않다가 각각 38.5%, 4.7%였음.
- 이념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응답이 2011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2010년 대비해서도 다소 증가

[그림 3-5] 이념갈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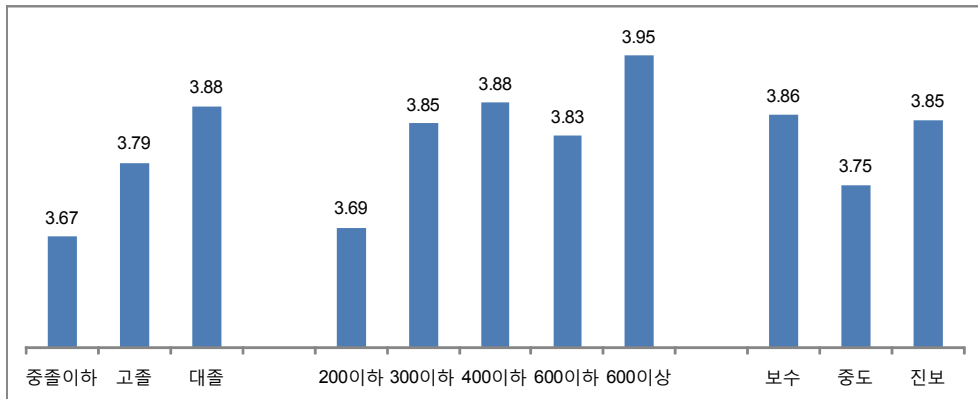


□ 집단별로 이념갈등에 대한 인식차를 확인하기 위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학력별로 고학력일수록 이념갈등에 대해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음.
  - 소득구간 면에서는 가장 고소득층인 월 6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저소득층에서는 심각성의 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남.
- 성별, 연령대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관측되지 않음.
  - 다른 질문에서 연령대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이념갈등을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으나 타 연령대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할 때 보수와 진보가 이념갈등이 심하다고 느낀 반면 중도에서는 그 정도가 다소 덜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6] 집단별 이념갈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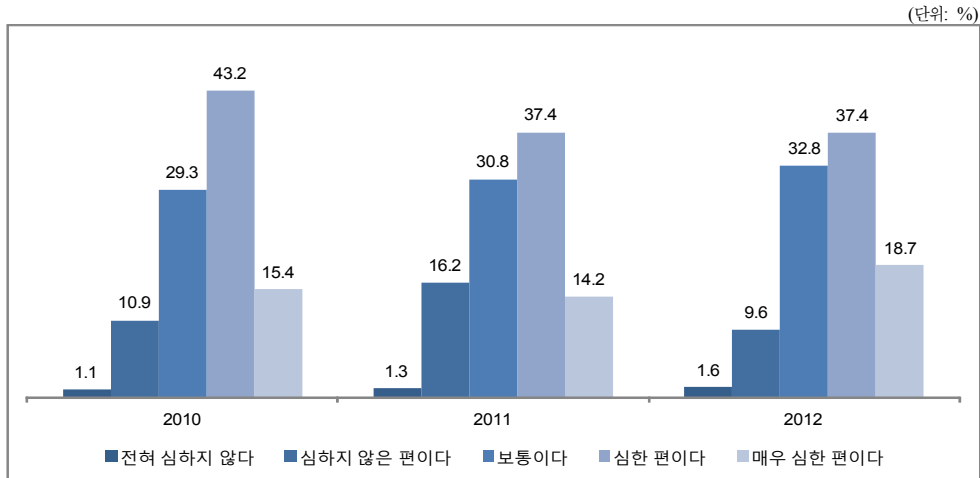


주: 1. 전혀 심하지 않다 ~ 5. 매우 심한 편이다.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이념적 성향별 집단간 차이는 5%,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1%의 범위 내에서 유의함.

#### 4. 지역갈등

- 서울과 지방간의 지역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2012년 조사에서 응답분포는 아래의 [그림 3-7]의 우측 그래프와 같이 나타남.
  - 심한편이라는 응답이 37.4%로 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이 보통이라는 응답 (32.8%)임.
  - 서울과 지방의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56.1%로 심하지 않다는 응답(11.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
  - 2011년 대비 심하다는 응답은 다소 증가,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감소하였음
    - 2011년은 각각 51.6%, 17.5%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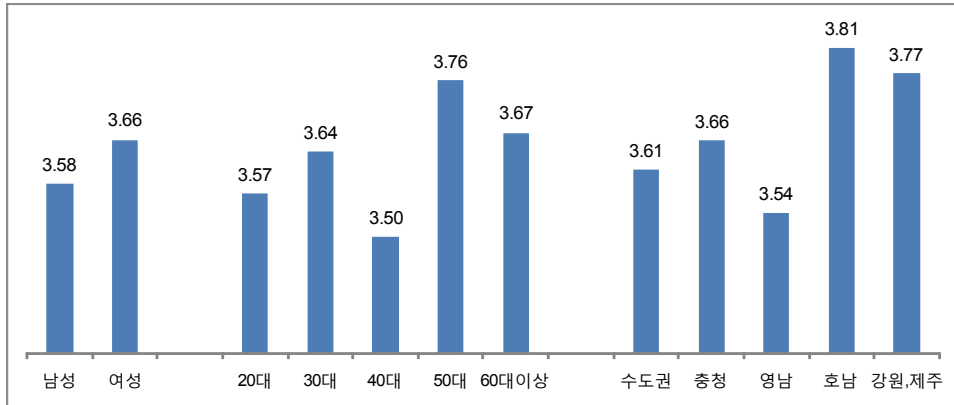
[그림 3-7] 지역갈등에 대한 인식



- 지역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집단별 비교시 전체적으로는 지역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남정보다 여성이 지역갈등의 심각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가장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0대에서 가장 덜 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강원 및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기타 학력이나 소득구간, 이념적 성향에 따른 집단 구분시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그림 3-8] 집단별 지역갈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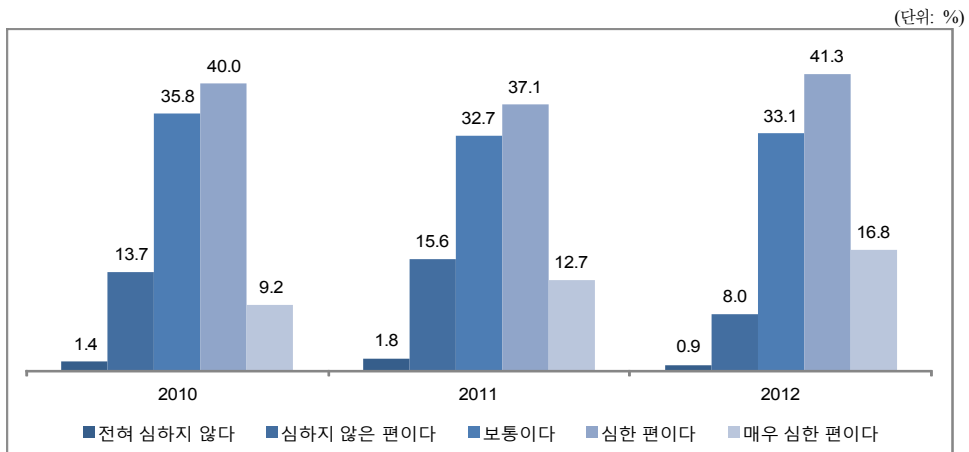
주: 1. 전혀 심하지 않다 ~ 5. 매우 심한 편이다.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성별 차이는 10%, 연령과 지역별 차이는 1%의 범위 내에서 유의함.

## 5. 세대갈등

□ 세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분포는 [그림 3-9]와 같음.

- 심한편이라는 응답이 41.3%로 많고 다음으로 보통이라는 응답(33.1%)임.
- 세대간 갈등이 심하다(56.1%), 심하지 않다(8.9%)로 심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임.
- 2011대비 심하다는 응답 증가,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감소
  - 2011년은 각각 49.8%, 17.4%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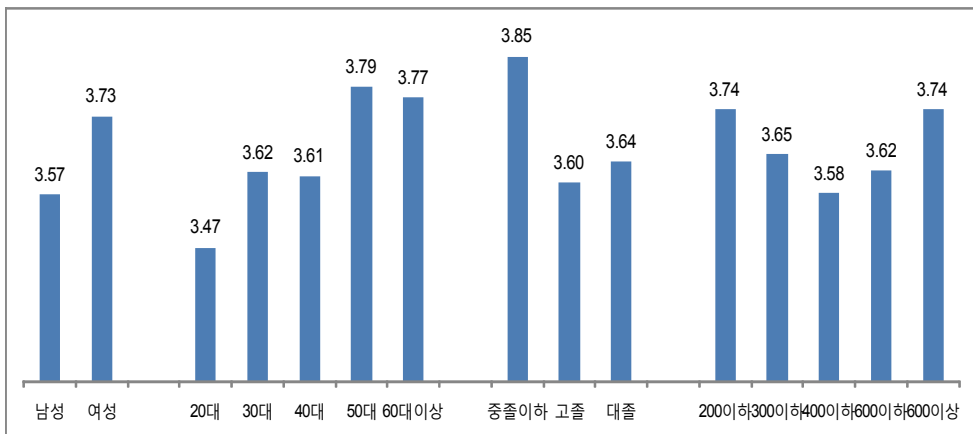
[그림 3-9]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 세대갈등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및 소득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남성에 비해 여성이 세대간 갈등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음.
- 세대간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연령대는 50대였으며, 다음으로 60대 이상임.
  - 20대에서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 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연령효과와 영향일 가능성이 높음.
- 소득구간별로 월 200만원 이하의 소득층과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세대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이념, 지역, 직업구분 등에서는 세대갈등의 인식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관측되지 않음.

[그림 3-10] 집단별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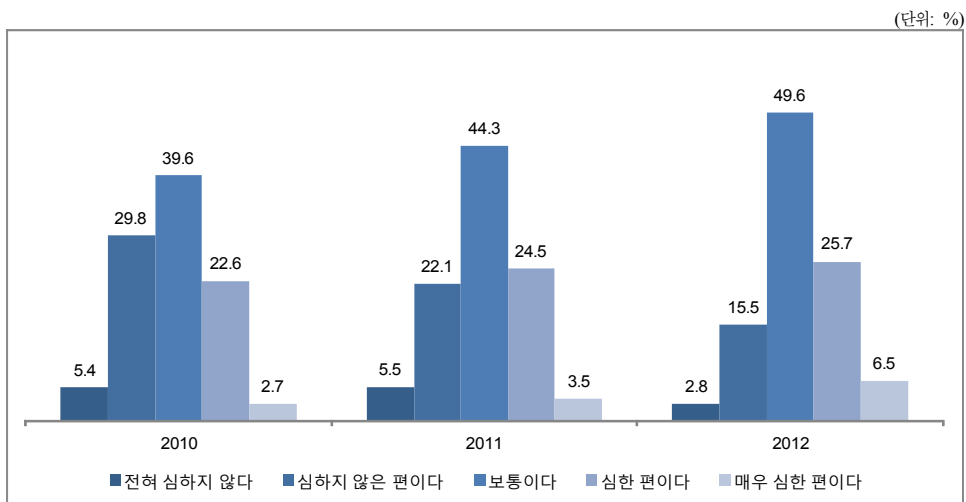
주: 1. 전혀 심하지 않다 ~ 5. 매우 심한 편이다.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소득구간별 차이는 10%, 성별, 연령과 학력별 차이는 1%의 범위 내에서 유의함.

## 6. 남녀갈등

□ 남녀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의 분포는 [그림 3-11]의 우측 그래프와 같이 나타남.

- 다른 영역과 달리 남녀간 갈등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거의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다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전 년도의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향임.
- 남녀간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32.2%로 심하지 않다는 응답(18.3%)에 비해 많음.
- 2011대비 심하다는 응답은 증가,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감소함.
  - 2011년에는 각각 28.0%, 27.1%였음.

[그림 3-11] 남녀갈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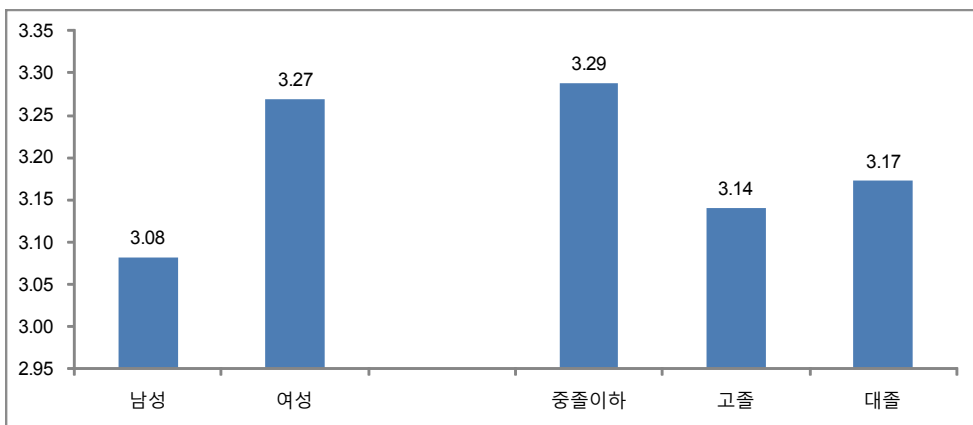


□ 남녀간 갈등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5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 여성은 3.27이었으나, 남성은 3.08로 거의 ‘보통이다’ 수준의 인식을 보임.

- 중졸 이하의 학력집단이 고졸 이상의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연령, 소득성향, 이념성향 등은 성별 갈등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3-12] 집단별 남녀갈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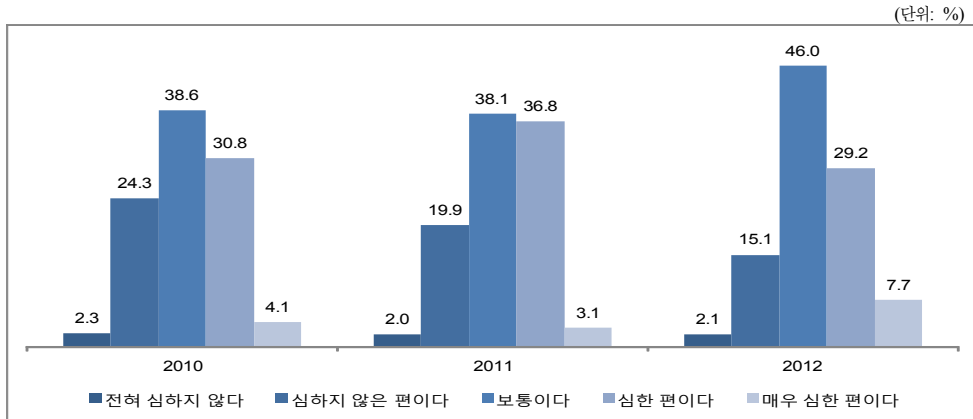


주: 1. 전혀 심하지 않다 ~ 5. 매우 심한 편이다.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학력별 차이는 5%, 성별 차이는 1%의 범위 내에서 유의함.

## 7. 문화갈등

-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타인종에 대한 갈등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의 분포가 [그림 3-13]의 우측그래프와 같이 나타남.
  - 보통이라는 응답이 46.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심한 편이다(29.7%)의 순임.
  - 문화적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36.9%)은 심하지 않다는 응답(17.2%)에 비해 약 두배 이상의 비율을 보임.
  - 2011년 대비 심하다, 심하지 않다 모두 감소
    - 2011년은 각각 39.9%, 21.9%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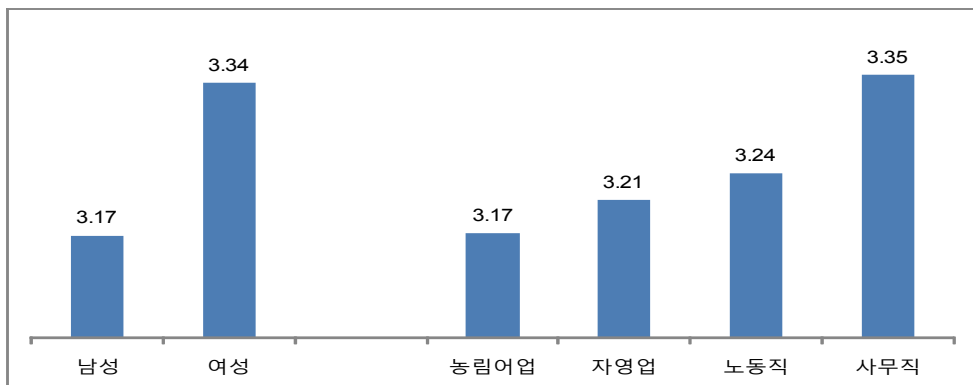
[그림 3-13] 문화갈등에 대한 인식



□ 문화적 갈등에 대한 인식의 집단별 차이는 성별, 직업별 구분시에 나타남.

-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문화적 갈등의 심각성을 더 느끼고 있음.
- 비경활이나 무직, 기타 직종 등을 제외한 후, 직업별로 구분하였을 때, 가장 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집단은 사무직인 반면, 농림어업 종사자가 가장 덜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연령대별, 학력별, 지역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로는 문화갈등에 대해 의미 있는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 3-14] 집단별 문화갈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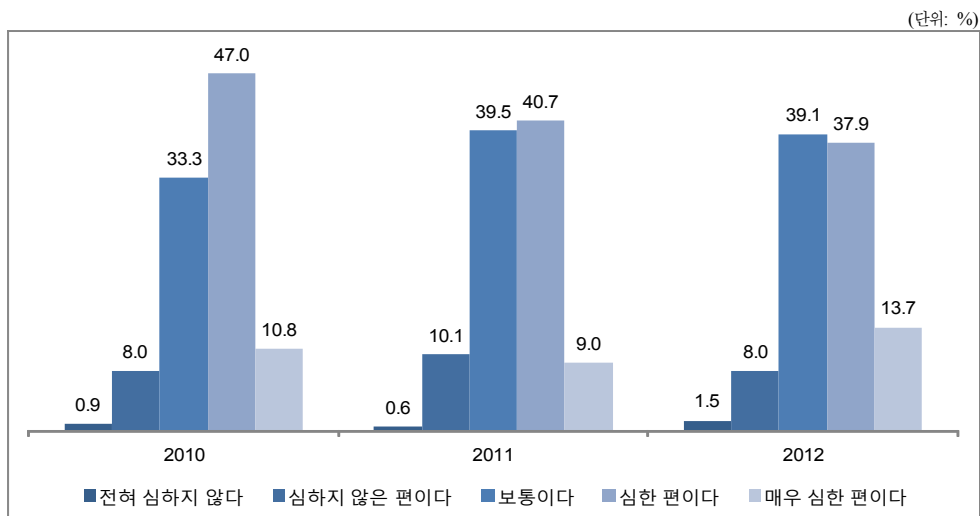
주: 1.전혀 심하지 않다 ~5. 매우 심한 편이다. 무응답은 분서에서 제외함  
 직업별 차이는 10%, 성별 차이는 1%의 범위 내에서 유의함.

## 8. 환경갈등

□ 마지막으로 환경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림 3-15]의 우측 그래프와 같은 응답비율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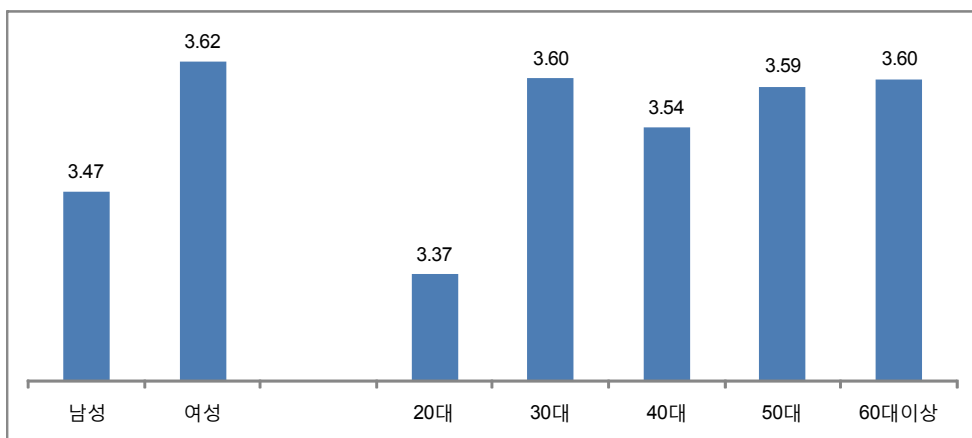
- 2012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것은 보통이다(39.1%)였고, 다음이 심한편이다(37.9%)였음.
- 지난 두 해의 조사의 경우 ‘심한 편이다’가 ‘보통이다’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
- 개발과 환경 보존을 둘러싼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51.6%)이 심하지 않다는 응답(9.4%)에 비해 훨씬 많음.
- 작년 대비 심하다는 응답은 증가하고,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감소(2011년은 각각 49.7%, 10.7%였음)
- 한편 2010년 조사와 비교할 때 심한편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약 10%p 가량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15] 환경갈등에 대한 인식



- 환경갈등에 대한 인식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과 연령대 간에 인식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위의 방법과 같이 5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 남성의 평균은 3.47인 반면 여성은 그보다 높은 3.62를 보임.
  - 연령별로는 30대와 60대 이상에서 다소 높았고 20대에서 가장 낮음.

[그림 3-16] 집단별 환경갈등에 대한 인식



주: 1. 전혀 심하지 않다 ~ 5. 매우 심한 편이다.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성별, 연령대별 차이는 1%의 범위 내에서 유의함.

## 9. 갈등 인식의 주요 특징

-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심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음.
  - 심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계층 갈등, 가장 낮은 것은 남녀간 갈등임.
  - 노사, 다문화갈등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작년 대비 심하다는 응답이 증가,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감소함.
- 응답자의 이념적 성향은 일부 영역에서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표 3-1>)

- 계층갈등, 노사갈등, 남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서 이념적 성향이 진보일수록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
- 한편 각 영역별 갈등 인식 사이에는 예외 없이 강한 (+)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즉 한 영역에서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여타 영역에서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

〈표 3-1〉 영역별 갈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

구분	계층	노사	이념	지역	세대	남녀	문화	환경	이념성향
계층	1.000	0.316*	0.226*	0.202*	0.212*	0.094*	0.100*	0.182*	0.117*
노사		1.000	0.311*	0.238*	0.186*	0.167*	0.130*	0.170*	0.041*
이념			1.000	0.242*	0.201*	0.095*	0.141*	0.179*	-0.011
지역				1.000	0.280*	0.224*	0.179*	0.169*	0.008
세대					1.000	0.265*	0.238*	0.183*	0.020
남녀						1.000	0.296*	0.160*	0.039*
문화							1.000	0.288*	0.014
환경								1.000	0.034
이념성향									1.000

주: 영역별 갈등은 1.전혀 심하지 않다 ~5. 매우 심한 편이다. 이념성향은 1.매우보수 ~ 5. 매우진보.

\*는 10% 수준에서 유의하며, † 은 1% 범위에서 유의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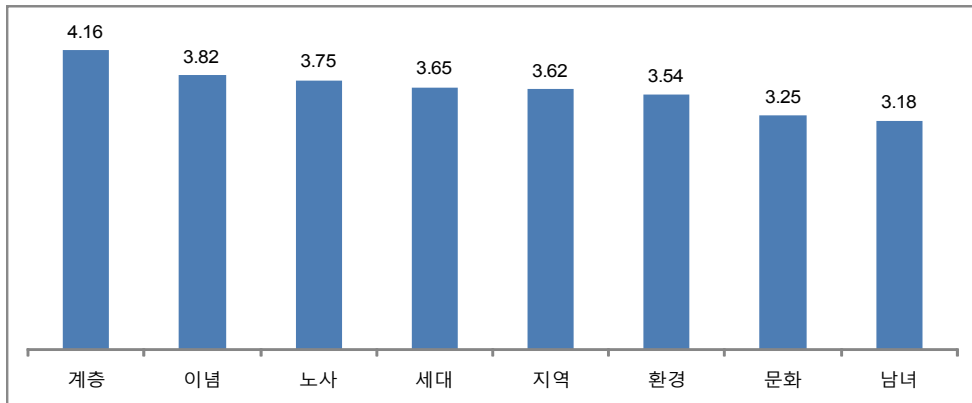
□ 각 영역별 갈등에 대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범주를 연속값으로 환산한 후(전혀 심하지 않다 1점 ~ 매우 심한 편이다 5점), 영역별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그림 3-17]과 같이 나타남.

- 가장 갈등이 심한 것으로 느끼는 영역은 계층갈등이었으며(4.16) 다음으로 이념(3.82), 노사갈등(3.75)의 순임.
- 상대적으로 갈등이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는 영역은 남녀갈등(3.18), 문화갈등(3.25)의 순임.
- 그러나 이러한 수치로 확인되는 순위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게 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는 다른 것임



- 갈등의 영역간 비교를 전제로 질문하지 않았으며, 갈등 해결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과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은 내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3-17]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영역간 비교



주: 전혀 심하지 않다(1점) ~ 매우 심한 편이다(5점)로 계산함.

## 제2절 시급히 대응해야 할 갈등

- 앞 절에서 살펴본 각 영역별 갈등 가운데 어떤 갈등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함.
  - 8개 영역의 갈등에 대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를 1, 2순위로 답하게 함.
  - 아래의 <표 3-2>는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응답된 영역의 비율을 보여줌.
- 1순위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것은 계층갈등(39.8%)이었으며 다음 노사갈등 (15.2%), 지역갈등(14.0%)의 순임.
  - 특히 계층갈등은 다음 순위인 노사갈등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응답을 보임
  - 세대, 남녀, 문화, 환경갈등 등은 응답 비율이 10% 미만임.

□ 2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노사갈등(21.8%)이었으며, 다음 계층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의 순임.

○ 1, 2순위를 구분하지 않고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 계층갈등이 57.7%로 1순위로 나타났으며, 2위는 노사갈등(37.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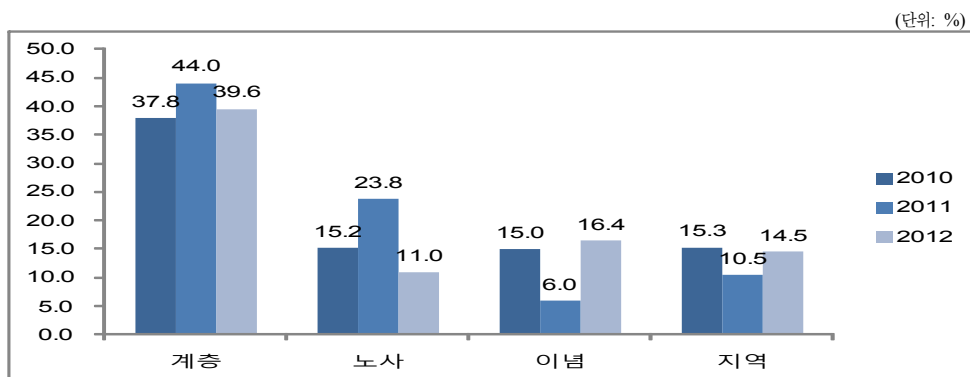
○ 종합 순위에서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것은 남녀갈등(6.1%)임.

□ 계층, 노사, 지역, 이념갈등이 1~4순위를 기록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갈등 1, 2순위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임. 즉 이 4 영역의 갈등과 나머지 4 영역의 갈등(세대, 남녀, 문화, 환경)은 그 시급성 면에서 뚜렷이 구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

갈등 영역	1순위		2순위		1,2 순위 종합	
	응답비율	순위	응답비율	순위	응답비율	순위
계층	39.8	1	18.0	2	57.7	1
노사	15.2	2	21.8	1	37.0	2
이념	13.8	4	14.6	4	28.3	4
지역	14.0	3	16.1	3	30.1	3
세대	4.7	6	10.0	6	14.7	6
남녀	2.2	8	3.8	8	6.1	8
문화	2.6	7	4.9	7	7.5	7
환경	7.7	5	10.9	5	18.6	5
계	100.0		100.0		200.0	

〔그림 3-18〕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갈등에 대한 인식(1순위)의 연도별 비교



- 계층, 노사, 이념, 지역 등 4개 갈등에 대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갈등(1순위)에 대한 응답비율을 지난 3개년 간 비교한 결과가 위의 [그림 3-18]에 제시됨.
- 3개년 모두 계층갈등이 계속하여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
  - 2012년의 계층갈등 응답비율은 2011년보다는 낮아졌으나, 2010년보다는 증가함.
-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의 순위는 매년 근소한 응답비율 차로 바뀌었으나, 전체적으로 계층갈등과 노사갈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0년의 응답분포와 2012년의 응답분포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바, 이는 조사 방법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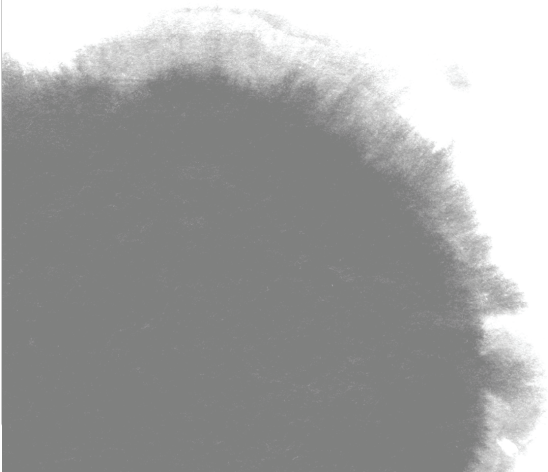
### 제3절 소결

- 사회통합 의식조사에는 매년 8개 영역별 갈등에 대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8개 영역의 갈등 중 가장 심각한 갈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음.
-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 심하다는 응답이 심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다수로 나타남.
  - 계층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82% >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
  - 노사갈등이 심하다는 응답(63.7%)이 심하지 않다는 응답(4.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음.
  - 이념 갈등은 심하다는 응답이 63.8%로 다수인 반면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함.
  - 서울과 지방의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56.1%로 심하지 않다는 응답(11.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
  - 세대 간 갈등이 심하다(56.1%) > 심하지 않다(8.9%)로 나타남.

- 남녀간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32.2%로 심하지 않다는 응답(18.3%)에 비해 많음.
  - 문화적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36.9%)은 심하지 않다는 응답(17.2%)에 비해 약 두배 이상의 비율을 보임.
  - 개발과 환경 보존을 둘러싼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51.6%)이 심하지 않다는 응답(9.4%)에 비해 훨씬 많음.
- 노사, 다문화갈등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작년 대비 심하다는 응답이 증가, 심하지 않다는 응답 감소
- 응답자의 이념적 성향은 계층, 노사, 남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
-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연속값으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 가장 갈등이 심한 것으로 느끼는 영역은 계층갈등이었으며(4.16) 다음으로 이념(3.82), 노사갈등(3.75)의 순임.
- 이와는 별도로 각 영역별 갈등 가운데 어떤 갈등이 가장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지를 비교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 1순위로 가장 높은 비율로 지목된 것은 계층갈등이며, 다음 노사, 지역 갈등의 순임.
- 1, 2순위를 종합한 결과 역시 계층갈등이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고, 다음이 노사갈등임.
  - 계층, 노사, 지역, 이념갈등에 대한 순위와 나머지 갈등에 대한 순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향이 나타남.

# 4장

##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





## 제4장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

### 제1 절 문제제기

- 한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문제는 주관적 의식의 문제와 객관적 조건의 문제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그 이유는 사회적 결속력이나 신뢰 등을 나타내는 주관적 의식만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 매우 피상적인 해석에 그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임.
  - 사회적 결속력과 신뢰의 정도는 경제사회구조적인 요인 외에도 다양한 사건적 (Evenement)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
  - 이는 조사시점에 특정한 사건이 개입되는 경우, 주관적 의식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과 관련이 있음.
  
- 이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주관적 의식의 변화, 즉 응답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시점의 사건을 그 성격과 강도(전파력)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새로운 연구 과제임.
  - 어떠한 집단이 어떠한 사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점을 규명해야 하는 것임.
  
-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회통합과 사회적자본의 문제 또한 이러한 문제점과 해결과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이미 World Value Survey를 통한 분석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응답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경우, 시계열적으로 안정된 결과를 얻기 힘든 경우가 많음.
- 그리고 그것은 신뢰(Trust)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한국의 예를 든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조사시점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반응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임.
  - － 특히 2005년 조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양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이 장에서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적 귀속감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기초분석과 더불어 사회적 결속력과 사회적자본의 관계를 분석하고, 다시 사회적자본의 변화가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특히 하위집단별로 귀속감과 신뢰도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 왔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임.

## 제2절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변화

- 점차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임.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변화를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함.
  - 다만 이 데이터가 모두 동일한 조사방식에 따라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의 신뢰도를 파악하고,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함.
  - 먼저 2010년과 2011년 그리고 2012년 데이터가 동질적인 결과를 담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비교할 것이며, 이어 동일하게 전화조사방식을 취한 2010년과 2012년 데이터를 비교할 것임.
  - 만일 두 가지 방식에 따른 비교분석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다면, 이후 조사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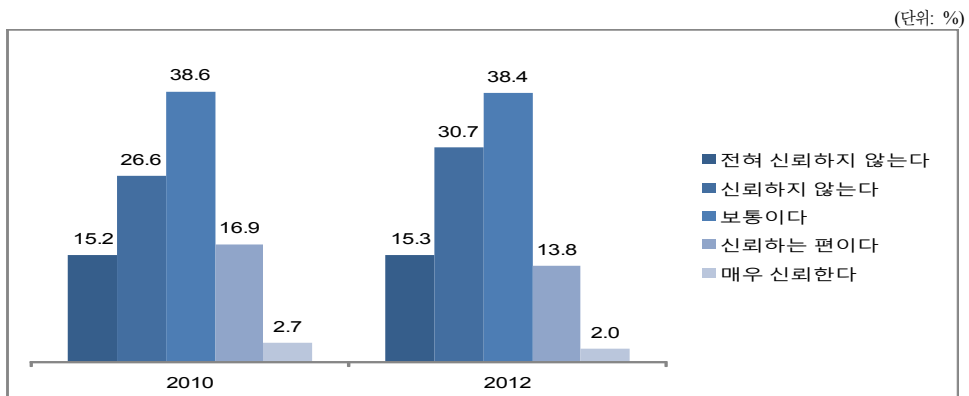


식과 연도별 조사결과에 대한 비교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1.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변화<sup>1)</sup>

-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여부는 사회통합 인식의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음. 정부(행정부), 국회(정당/입법부), 법원(사법부), 경찰, 언론(신문/방송), 금융기관(은행) 6개 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전체적으로 조사한 6개 공공기관 모두가 신뢰한다는 응답보다는 신뢰하지 않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2010년 대비 변화를 살펴보면 국회를 제외한 5개 기관의 신뢰도가 다소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선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정부(행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불신(46.0%)한다는 응답이 신뢰(15.8%)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대비 신뢰수준은 다소 감소(19.6%→15.8%)하고 불신수준이 다소 증가(41.8%→46.0%)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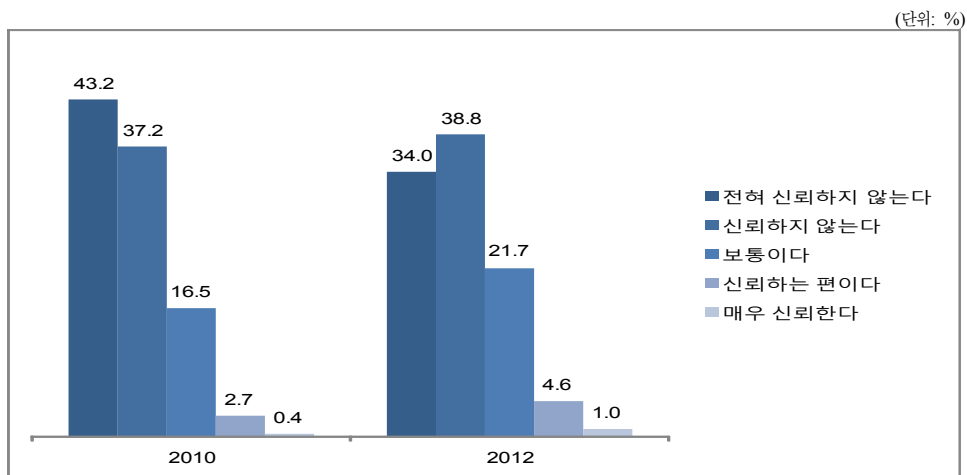
[그림 4-1] 정부에 대한 신뢰도



1) 2011년은 조사방법 및 조사문항의 차이로 이 부분의 공공기관 신뢰도에 대한 기초 현황분석은 2010년과 2012년 동일 조사방법 및 문항에 대한 비교 분석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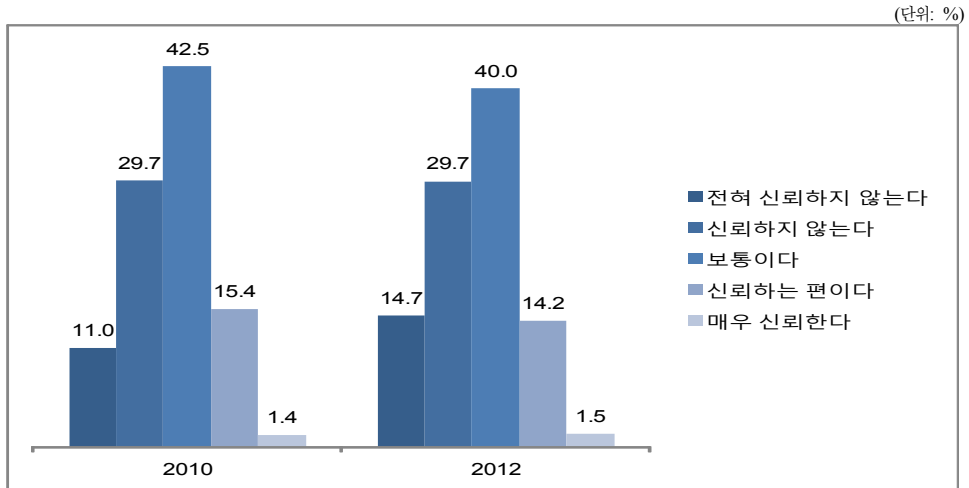
- 국회는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신뢰(5.6%)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2.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2010년 대비 국회에 대한 신뢰는 다른 기관의 신뢰가 감소한 것에 반해 다소 증가(3.1%→5.6%)하였으며, 불신수준은 다소 감소(80.4%→72.8)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4-2] 국회에 대한 신뢰도



- 법원(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15.7%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44.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신뢰수준은 다소 감소(16.8%→15.7%)하고, 불신 수준이 다소 증가(40.7%→44.4%)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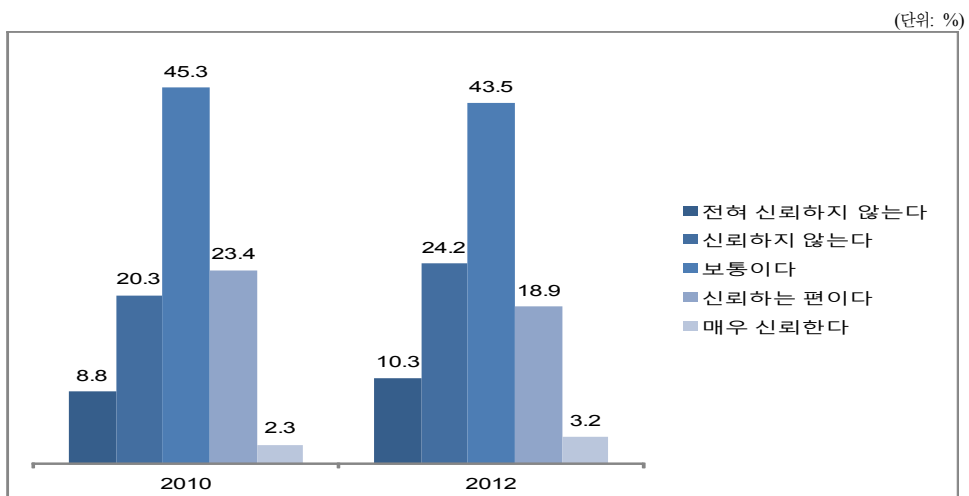
[그림 4-3] 법원에 대한 신뢰도



□ 경찰은 금융기관과 더불어 20% 이상의 다소 양호한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은행 또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34.5%)이 신뢰한다는 응답(22.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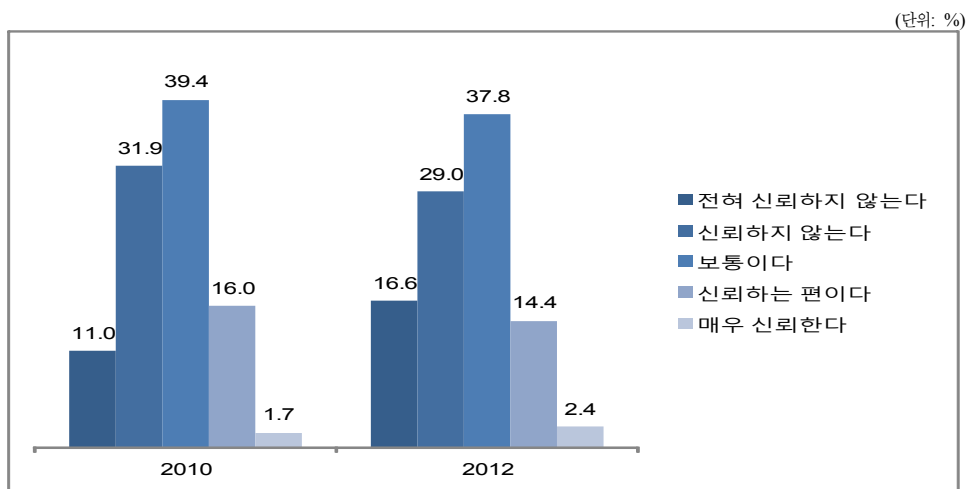
○ 2010년과 비교하여 신뢰수준은 다소 감소(25.7%→22.1%)하였으며, 불신 수준은 다소 증가(29.1%→34.5%)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4-4] 경찰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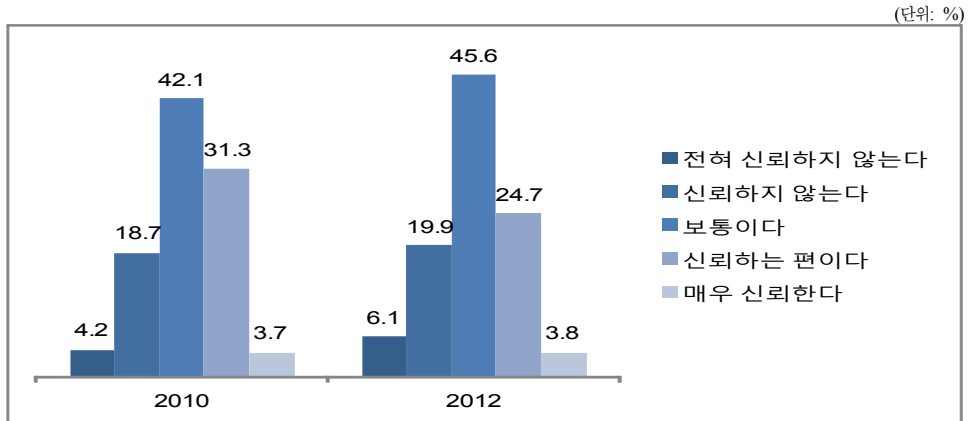
- 2012년 현재 언론(신문/방송)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16.8%,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6%로 나타나고 있음.
- 2010년과 비교하면 신뢰수준은 다소 감소(17.7%→16.8%)하였으며, 불신수준이 다소 증가(42.9%→45.6%)하였음.

[그림 4-5] 언론에 대한 신뢰도



- 금융기관(은행)에 대한 신뢰도는 28.5%로 6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신뢰한다는 응답(28.5%)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26.0%)보다 유일하게 높게 나타난 기관임.
- 그러나 이는 2010년과 비교하면 신뢰 수준이 다소 감소(35%→28.5%)하였으며, 불신수준은 다소 증가(22.9%→26.0%)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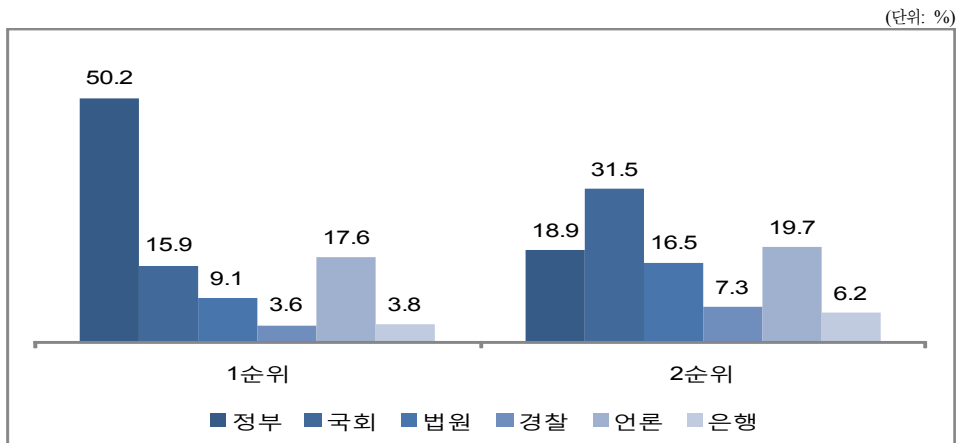
[그림 4-6]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 위의 6개 공공기관 중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주체로서 가장 적합한 기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1순위는 정부, 언론, 국회의 순으로 나타나고, 2순위는 국회, 언론, 정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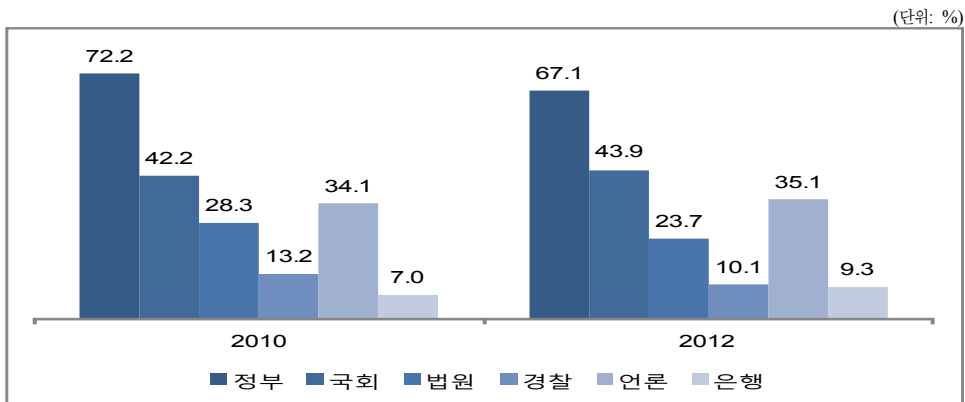
[그림 4-7] 갈등 관리 주체에 대한 인식(1순위, 2순위)



- 1, 2순위 모두 이 세 기관이 상위를 차지하면서 종합순위 역시 정부, 국회, 언론 순으로 나타남.

- 정부라는 응답 누계는 2010년 대비 다소 감소(72.2%→67.1%)하였으며, 국회는 다소 증가(42.2%→43.9%)하였음.

[그림 4-8] 갈등 관리 주체에 대한 인식(종합순위)



## 2. 3차 년도에 걸친 공공기관 신뢰도 변화의 크기

□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변화는 대상기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향후 보다 장기간의 시계열 조사를 통해 이러한 가설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지난 세 차례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신뢰도의 변화가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정부, 국회, 법원, 경찰, 언론, 은행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값을 연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다른 기관에 비해 연도별 차이가 큰 기관은 경찰, 언론, 은행으로 나타남.
- 이는 지난 3년간 정부나 국회 그리고 법원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 것에 비해, 다른 공공기관의 신뢰도는 다양한 사건적 요인에 의해 큰 등락세를 보이는 특성을 말해줌.

〈표 4-1〉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추이

구분	정부 신뢰도	국회 신뢰도	법원 신뢰도	경찰 신뢰도	언론 신뢰도	은행 신뢰도	합계 평균
2010	2.65	1.80	2.66	2.90	2.66	3.12	15.79
2011	2.54	1.99	2.63	2.58	2.97	3.10	15.80
2012	2.57	2.00	2.58	2.81	2.57	3.00	15.52

주: 셀의 수치는 평균, 합은 전체 신뢰도의 합의 평균임

□ 공공기관 신뢰도가 년도 별로 큰 등락을 보이는 점과 관련해서 각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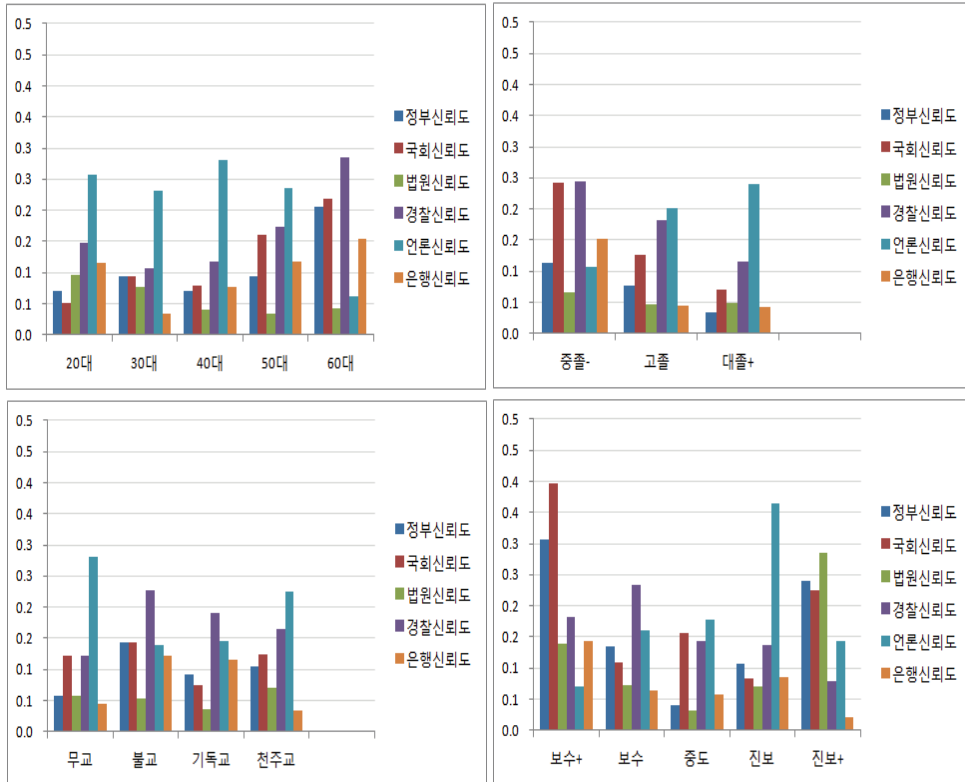
- 아래 그림은 좌측 상단부터 차례로 연령, 교육수준, 종교, 이념성향에 따라 공공기관 유형별 신뢰도에서 얼마나 큰 변동을 보여주는지 나타낸 것임.
- 연령집단별로 보면(좌측 상단 그림), 연령대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공기관 유형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20대부터 50대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60대 이상 집단은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최근 잇따른 범죄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60대는 다른 집단에 비해 정부와 국회의 신뢰도에서도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
- 교육수준별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우측 상단 그림)를 보면, 상대적으로 저학력자에게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저학력자 집단은 국회와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연령대별 편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 높은 연령대일수록 저학력자 비중이 높다는 점과 관련이 있음.
  - 고졸 및 대졸이상 학력자의 경우에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종교에 따른 공공기관 신뢰도 변화를 보면(좌측 하단 그림), 언론에 대한 신뢰도와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보다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 － 흥미로운 점은 종교가 없는 집단과 천주교를 믿는 집단의 경우,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불교와 기독교를 믿는 집단의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끝으로 정치이념성향에 따른 공공기관 신뢰도를 보면, 정치이념에서 상대적으로 극단에 위치한 매우 보수적인 집단과 매우 진보적인 집단에서 신뢰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 하지만 두 집단의 경우, 변화가 큰 공공기관이 상이함. 즉, 매우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큰 폭으로 변화하고, 매우 진보적인 집단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변화하지만, 법원에 대한 신뢰도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이 집단이 최근 각종 사안에 대한 법원과 검찰에 대한 개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임.
  - －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집단의 신뢰도 변화인데, 이 집단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에서 민감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4-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공기관 신뢰도의 표준편차



주: 각 막대의 수치는 2010년~2012년 각 인구사회학적 집단별 평균 값의 표준편차임

### 3. 2010년~2011년 및 2011년 2012년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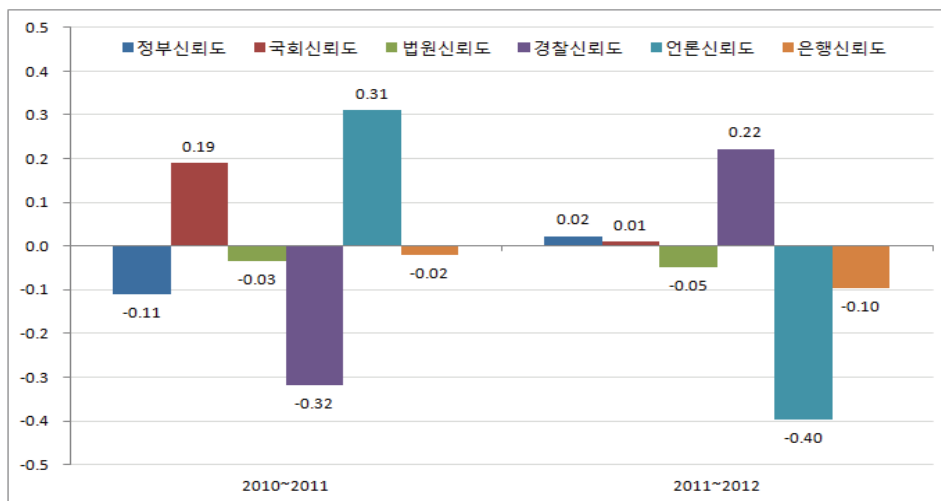
□ 2010~2011년, 2011~2012년 두 시점으로 구분하여 공공기관 유형별로 신뢰도가 얼마나 등락을 거듭했는지 살펴보기로 함.

○ 2010년~2011년 기간 중에는 국회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언론의 신뢰도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 경찰의 신뢰도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1년~2012년에는 경찰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언론과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경찰에 대한 신뢰도 증가는 추후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대선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각 언론의 보도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음.
- 은행과 관련해서는 2011년 말 증폭된 저축은행 사태가 2012년 국민들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그림 4-10] 공공기관 신뢰도의 평균 값 변화 : 2010~2011/ 2011~2012



주: 1) 각 막대의 수치는 평균값의 전년대비 변화(%p)임.

□ 인구사회학적 집단이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인 신뢰도의 차이를 년도 간 변화(%)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모든 그림에서 좌측은 2010년~2011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고, 우측은 2011년~2012년의 차이를 나타낸 것임.
- 이 그림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변화가 어떠한 집단에게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것이 각 년도의 다양한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암시하고 있음.
- 먼저 이 그림은 하나의 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경찰 신뢰도와 언론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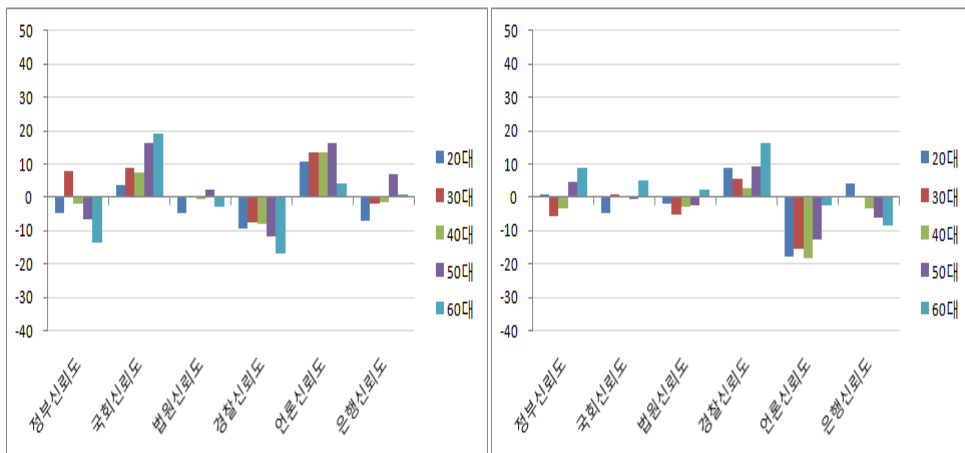
도가 2011년과 2012년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임.

— 전자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지고, 후자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임.

○ 정치이념성향별 신뢰도 변화를 보면, 매우 진보적이라고 답한 집단과 진보적이라고 답한 집단 간의 신뢰도가 상이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음.<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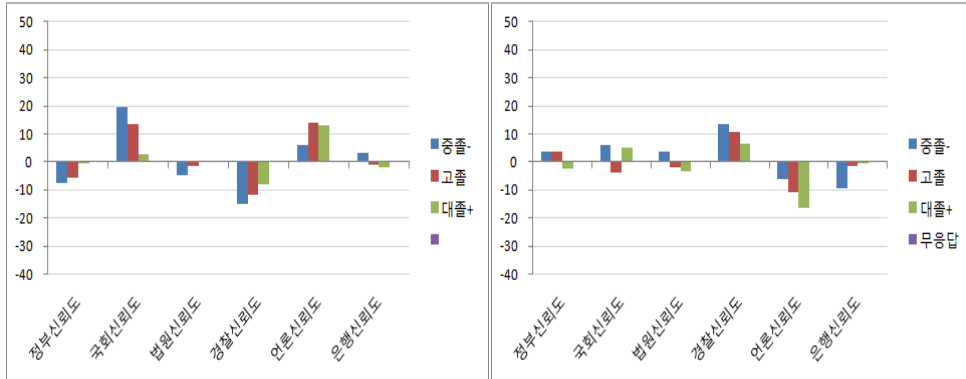
— 매우 진보적이라고 답한 집단이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면, 진보적이라고 답한 집단은 정부와 국회신뢰도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증가하고, 언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증가하는 선별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그림 4-11] 시기별 연령집단별 공공기관 신뢰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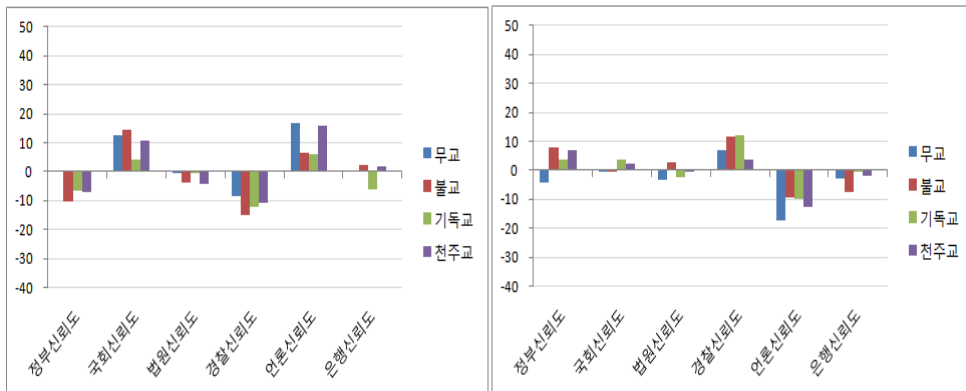


2) 물론 매우 진보적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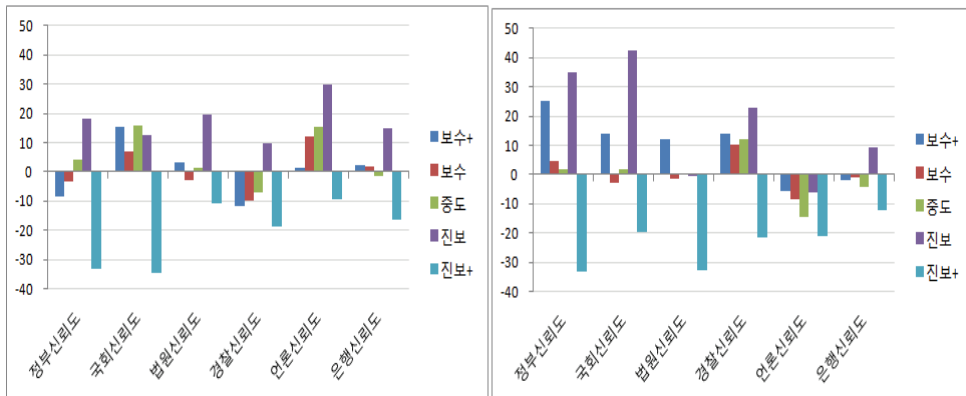
[그림 4-12] 시기별 교육수준별 공공기관 신뢰도 변화



[그림 4-13] 시기별 종교별 공공기관 신뢰도 변화



[그림 4-14] 시기별 이념성향별 공공기관 신뢰도 변화



주: 1) 좌측 그림은 2010년~2011년, 우측 그림은 2011년~2012년 변화치임.

2) 각 막대의 수치는 평균값의 전년대비 변화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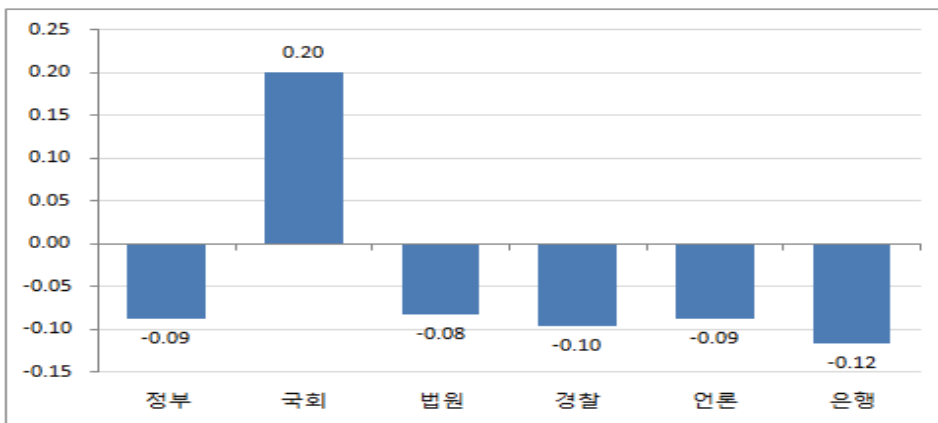
- 그러나 위의 분석결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인해 신뢰도의 변화가 과대 추정한 것일 수 있음.
  - 경찰과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불과 1년의 시점에서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이유가 2011년 데이터가 2010년 및 2012년 데이터와 다른 조사방식을 취했기 때문일 수 있음.
    - 참고로 패널조사에서도 3차년도 분석결과는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그것은 조사문항의 변경이나 조사방식 및 조사주체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오류가 응답자의 태도변화로 해석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임. 그리고 이 문제는 많은 경우, 분석차수가 증가하면서 그 원인이 규명되는 경향이 있음.

#### 4. 2010년과 2012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변화

- 위에 언급했던 조사방식 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포착하기 위해, 같은 조사방식에 따라 얻어진 2010년 데이터와 2012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형별 신뢰도 변화를 살펴보기로 함.
  - 아래 그림은 3차 년도에 걸친 변화에 비해 그 해석이 단순함. 등락이 존재하지 않는 두 시점의 비교이기 때문임. 따라서 앞서 언급하였던 2010~2011 / 2011~2012의 연도별 변화와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음.
-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방법에 따른 분석결과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
  - 하나는 2010년~2011년의 변화에 비해, 2010년~2012년의 변화가 덜하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변화방향에 대한 해석도 더 일관성이 있다는 점임.
    - 실제로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일관된 태도변화처럼 해석될 수 있음.

- 외형적으로 보면, 경찰과 언론에 대한 태도변화 중 일부는 2011년 데이터의 조사방식에 기인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그렇다고 전적으로 이러한 문제로 간주하기보다 문항별로 변화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림 4-15] 공공기관 신뢰도의 평균 값 변화 : 201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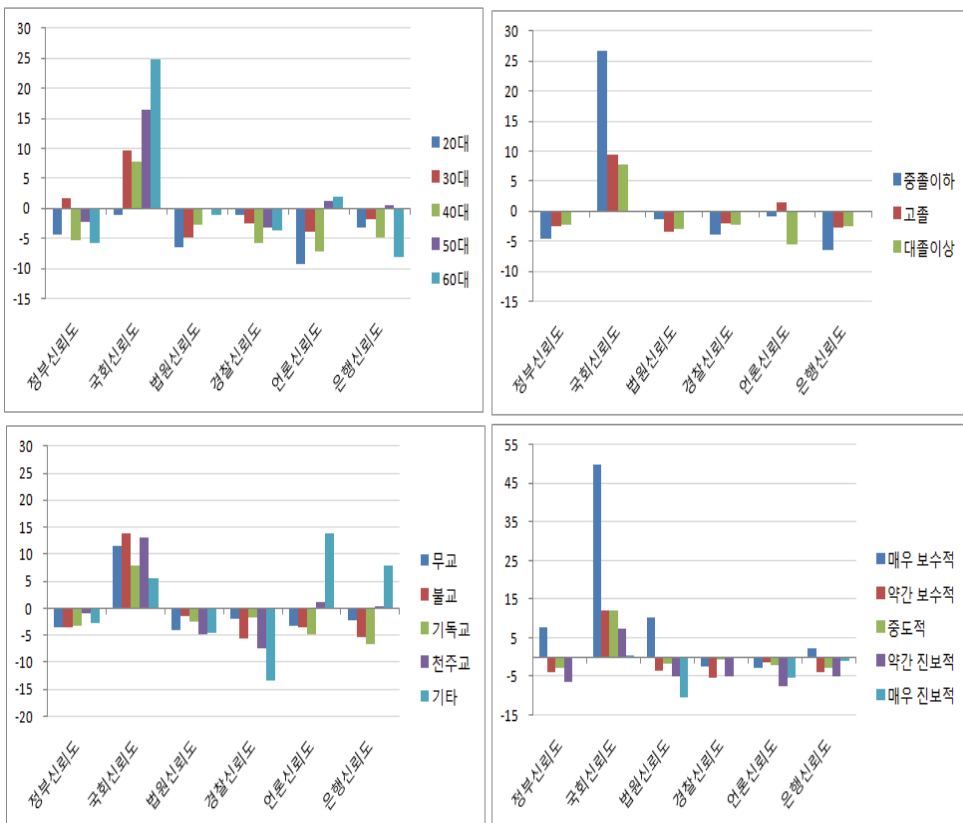
주: 1) 각 막대의 수치는 평균값의 전년대비 변화(%p)임.

□ 2010년~2012년 공공기관 신뢰도 변화의 크기를 보면 다음과 같음,

- 2010년~2011년, 그리고 2011년~2012년의 신뢰도 변화의 크기가 매우 크다고 말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달리 표현하면, 오히려 태도변화의 크기는 연도 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임.
- 그리고 2010년과 2012년 데이터의 비교에서도 매우 큰 태도변화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매우 뚜렷한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짐.
  - 아래 그림에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큰 폭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거의 모든 하위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임.
  - 그것은 2012년 대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 거는 기대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임.

- 하지만 하위집단별로 태도변화의 크기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연령대로 보면, 다른 집단에 비해 60대 이상 집단, 중졸이하 저학력집단, 정치이념상 매우 보수적인 집단에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지난 1차년도 및 2차년도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던 것처럼,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정치이념성향 측면에서 특정 집단의 비중이 높고, 이 집단이 각종 사안에 대해 특정한 태도를 보인 결과라고 판단됨.

[그림 4-16] 2010년~2012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변화



주: 막대의 수치는 2010년에서 2012년 각 집단별 평균값의 변화(%)

### 제3절 사회적 결속력의 변화

- 사회적 결속력이란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귀속감을 갖는가를 말함. 이는 이후 각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에서 얼마나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양보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물론 이 귀속감이 항상 긍정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님. 때로 강력한 귀속감은 외부와의 관계에서 배타성을 띠는 경향이 있으며,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감성적 판단을 강요하기도 하기 때문임.
- 사회적 결속력은 귀속감 외에도 소통과 실천이라는 두 가지 잣대를 통해 보완적으로 설명되어야 함.
  - 달리 표현하면, 이러한 귀속감의 토대라 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기회균등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으며, 타인이 사회적 규범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임.
  - 모두 주관적 응답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추상적 표현과 구체적 실천 사이의 괴리를 보완하는 것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연구 영역임.
- 이 절에서는 사회적 결속력의 변화를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2년 세 시점 사이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함.<sup>3)</sup>

#### 1. 사회적 결속력에 대한 연도별 태도변화

- 지난 3년간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국가 귀속감>, <경제사회적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 그리고 <타인의 준법정신>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태도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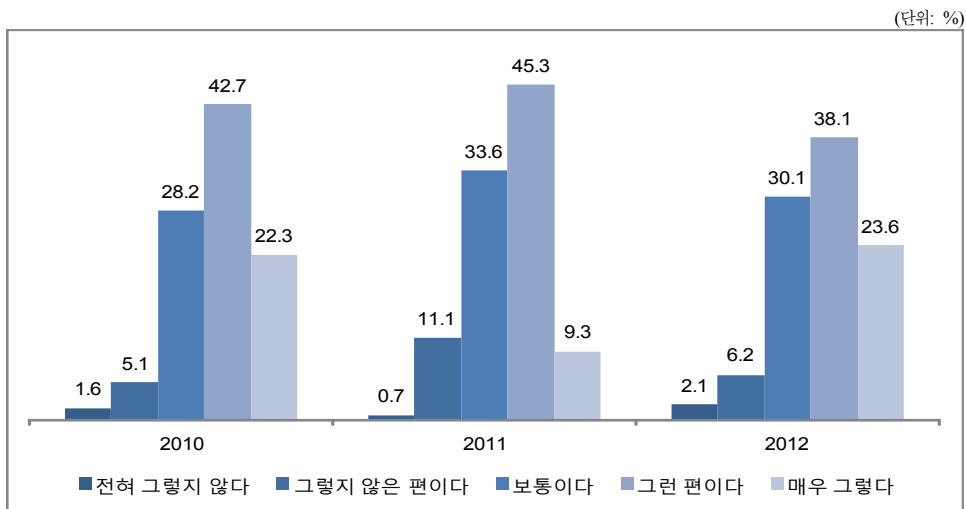
3) 지난 3년간의 조사결과는 동일한 질문문항에 대한 답변을 비교 분석한 것임. 다만, 2011년 조사가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분석결과를 비교함에 있어 조사방식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 점에서 연도별 차이에 대한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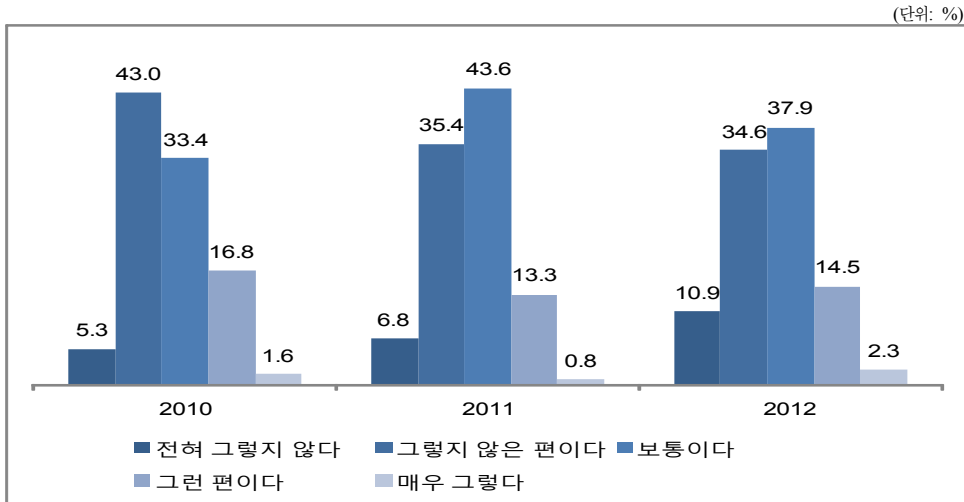
- 우선, 2012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한 질문에는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61.7%)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8.3%)보다 높게 나타남.
  - 2010년~2012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은 2010년에 비해 다소 감소(65%→54.6%)하였으나, 2012년 다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11년은 2010년에 비해 다소 증가(6.7%→11.8%)하였으나, 2012년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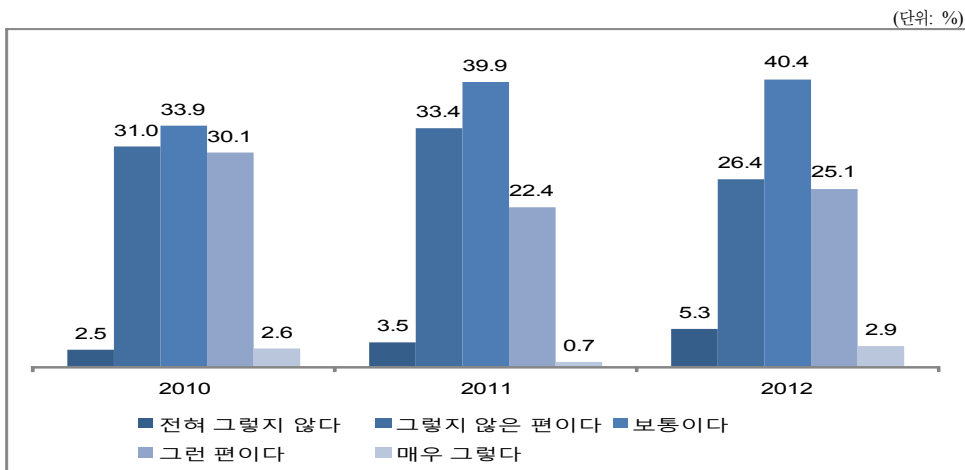
- 다음으로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은 기회균등이 보장된다는 응답이(16.8%) 그렇지 않다는 응답(45.4%)보다 낮게 나타나 우리 사회의 기회균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음.
  - 2010년 대비 2011년의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 모두 다소 감소(각각 48.3%→42.2%, 18.4%→14.1%)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는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 모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8]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



- 또한 준법정신에 대한 질문에도 법을 잘 지킨다는 응답(28.0%)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31.7%)보다 낮게 나타나 준법정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임.
- 2010년 대비 2011년의 긍정적 응답은 감소(32.7%→23.1%)하였다가 다시 2012년에 증가하였으며, 부정적 응답은 증가(35.4%→36.9%)하였다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9] 준법정신에 대한 인식



□ 귀속감 및 준법정신을 5점 척도로 하여 그 평균값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귀속감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2011년의 수치가 나머지 두 해의 수치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2012년의 수치 또한 다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음.
- 기회균등은 전체 년도에 걸쳐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준법정신과 관련해서도 2011년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4-2〉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기회균등 그리고 준법정신에 대한 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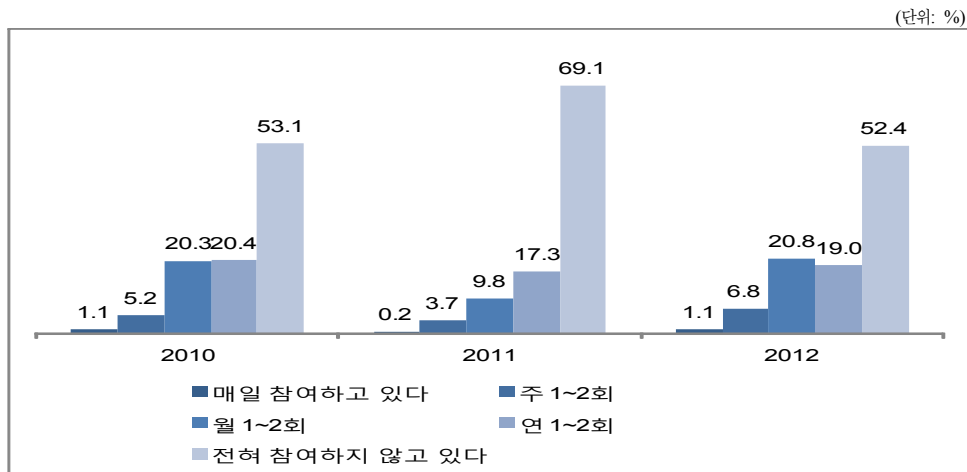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Total
국민 자부심	3.79	3.51	3.75	3.72
기회균등	2.66	2.66	2.63	2.65
준법정신	2.99	2.83	2.94	2.94

주: 1(전혀 그렇지 않다(동반자 아니다)) ~ 5(매우 그렇다). 무응답은 제외한 평균값임

□ 다음으로 사회적 결속력의 발현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나눔활동 및 자원봉사 참여 정도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기업이나 부유층의 기부 및 봉사활동(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사회통합 기여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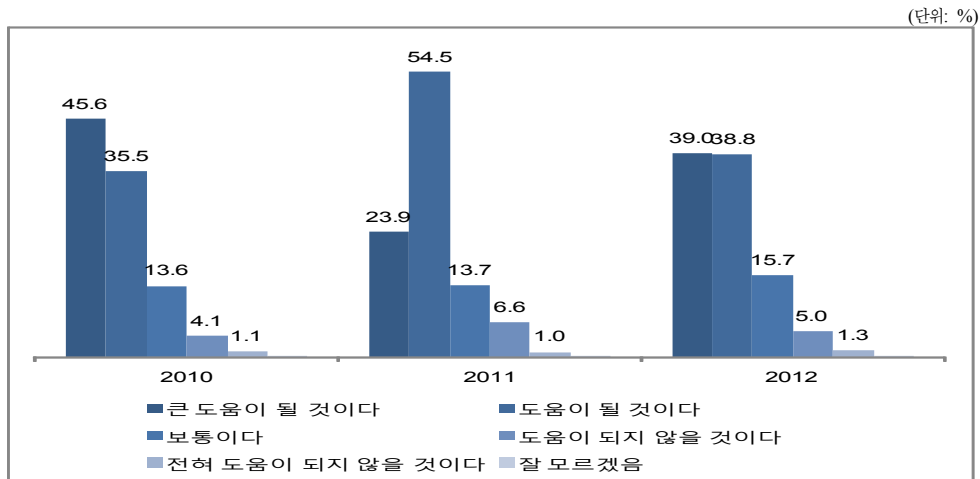
- 먼저, 2012년 나눔과 자원봉사의 참여율은 47.7%로 전년(31.0%) 대비 크게 증가

[그림 4-20] 나눔 및 자원봉사 참여 수준



- 다음으로 부유층과 기업의 나눔활동이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77.8%로 압도적이었으나, 그 비율은 전년 대비 큰 변화 없음.

[그림 4-21] 노블레스 오블리제에 대한 인식



- 사회적 결속에 대한 위 문항들에 대한 연도별 답변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먼저 2011년 데이터가 다른 조사방식을 취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어 특정 사안이 다른 사안에 비해 조사시점 이전의 사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했을 개연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문제는 이러한 요인을 판별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임. 특히 다른 질문에 비해 기회균등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안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함.

- 조사시점별로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이 차이를 보이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각 답변의 평균 값 간에 존재하는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임.

-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기회균등이나 시민들의 준법정신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음.

- 특히 경제사회적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 이 점에서 우리사회에서 국민들의 사회적 결속력은 그 토대가 매우 취약하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임. 즉, 높은 귀속감과 대비되는 낮은 공정성과 취약한 법치주의가 이를 나타내고 있음.

## 2.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의 변화

- 최근 한중일 간의 영토분쟁이 격화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3국간의 정치적, 문화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귀속감은 매우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임.
  - 각국이 정권교체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함으로써 표를 얻으려는 생각이 다분히 국수주의적 태도를 고양시키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사회에서 2012년의 귀속감 정도(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정도)는 이전 시점보다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으나, 전반적인 귀속감 강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2년 본 조사의 조사시점이 9월로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판단됨.
  - 하지만 하위집단별로 보면,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목격되고 있음. 특정한 집단에서는 자부심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음.
-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래 그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다음과 같음.
  -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묻는 문항에 관한 한, 연도별 수치의 큰 변화는 2011년 데이터가 조사방식의 상이성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임.
    - 그것은 하위집단별 분석에서 거의 모든 집단의 2011년 응답이 다른 시점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이는 실제 응답자의 태도변화라기보다 조사방식의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석에 있어서 주로 2010년과 2012년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함.

□ 연령대별로 자부심에 대한 태도변화를 보면(좌측 상단 그림), 20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자부심이 강하다는 응답이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60대 이상 집단에서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예외적으로 20대 집단에서만 2010년에 비해 2012년의 귀속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영토분쟁 등 다양한 정치 사안에 대해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교육수준별로 보면(우측 상단 그림), 고졸 학력자에게서 자부심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집단에서는 자부심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중졸이하 학력자에게서 감소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위에 언급한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감소폭이 컸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짐.

□ 정치이념 성향별로 자부심에 대한 태도변화를 보면(좌측 하단 그림), 자신의 정치 이념성향이 매우 보수적이라고 답한 집단에게서 자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이념성향을 가진 집단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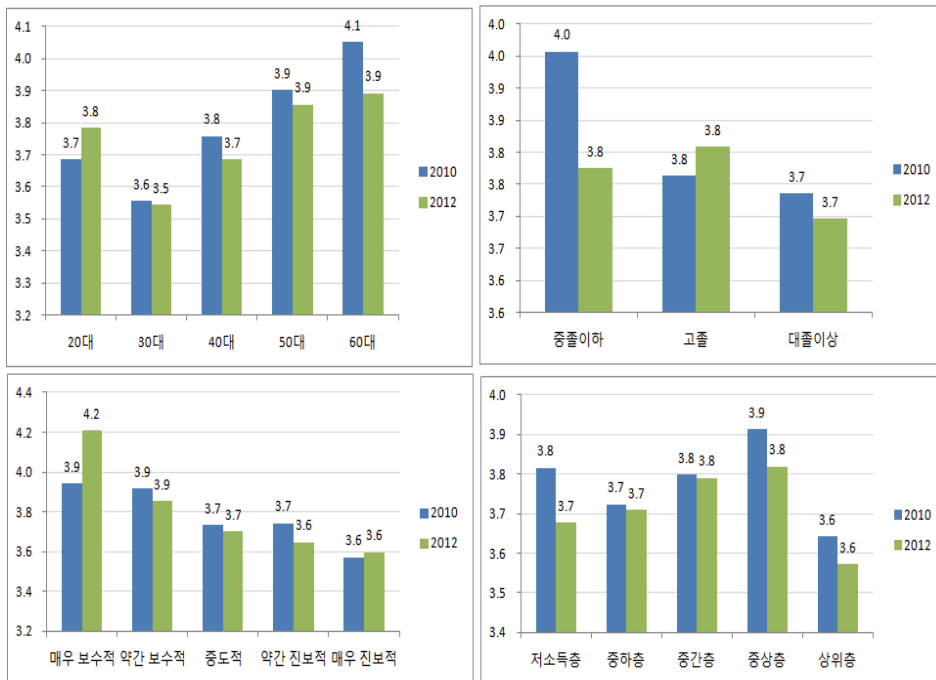
○ 하지만 이는 연령층 및 학력수준별 태도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이는 비노인, 중간학력이상자 중 보수적 성향을 지닌 집단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주관적 계층의식별로 보면(우측 하단 그림) 소득계층별로 태도변화가 다소 상이한 흥미로운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저소득층에게서는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중상층 및 상위층에서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이 세 집단에 비해 중하층과 중간층의 태도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전체 인구대비 비중이 큰 중하층 및 중간층에게서 자부심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4-22] 대한국민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한 인식 변화



주: 각 막대는 해당 집단별 응답의 평균값임

### 3. 경제사회적 기회균등에 대한 태도 변화

- 경제사회적 기회균등은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같은 주관적 귀속감을 공고하게 떠받치는 토대라고 말할 수 있음.
- 달리 표현하면, 각 개인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

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와 공동체에 애정을 갖거나, 자신이 구성원이라는 귀속감을 갖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많은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이 강한 적개심으로 변화하게 됨. 이는 최근 우리사회의 강력범죄 등을 통해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함.

□ 경제사회적 기회균등 보장에 대해 하위집단별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연령대별로 태도변화를 보면(좌측 상단 그림), 2010년에 비해 2012년 기회균등에 대한 태도가 다소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부정적인 태도변화는 특히 50대와 60대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 흥미로운 점은 20대와 3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판단이 증가하거나,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임.

- 현실에서 이 집단은 기회균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음.

- 교육수준별로 경제사회적 기회균등 보장에 대한 태도변화를 보면(우측 상단 그림), 초졸과 고졸의 집단에게서 기회균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대졸이상의 집단에게서는 기회균등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10년과 비교할 때, 2012년의 평균 값 감소폭은 매우 크게 나타남.

- 높은 대학진학률과 비교할 때, 근로자간 임금격차 확대와 고용불안의 확대가 이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는 교육수준과 연령집단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임.

- 정치이념성향별로 기회균등 보장에 대한 태도변화를 보면(좌측 하단 그림), 매우 이례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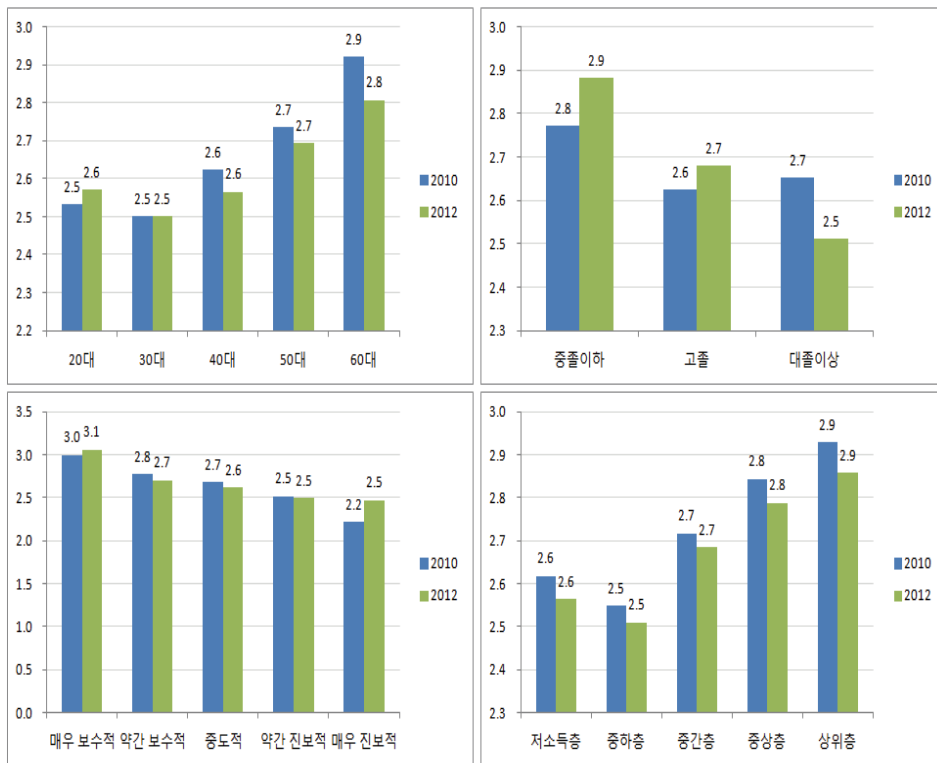
— 매우 보수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집단과 매우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집단에서만 기회균등 보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



고, 나머지 집단에서는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주관적 태도를 묻는 시계열 조사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해당 집단의 케이스가 작다는 점에서 이상치가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음.
-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태도변화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림 4-23] 경제사회적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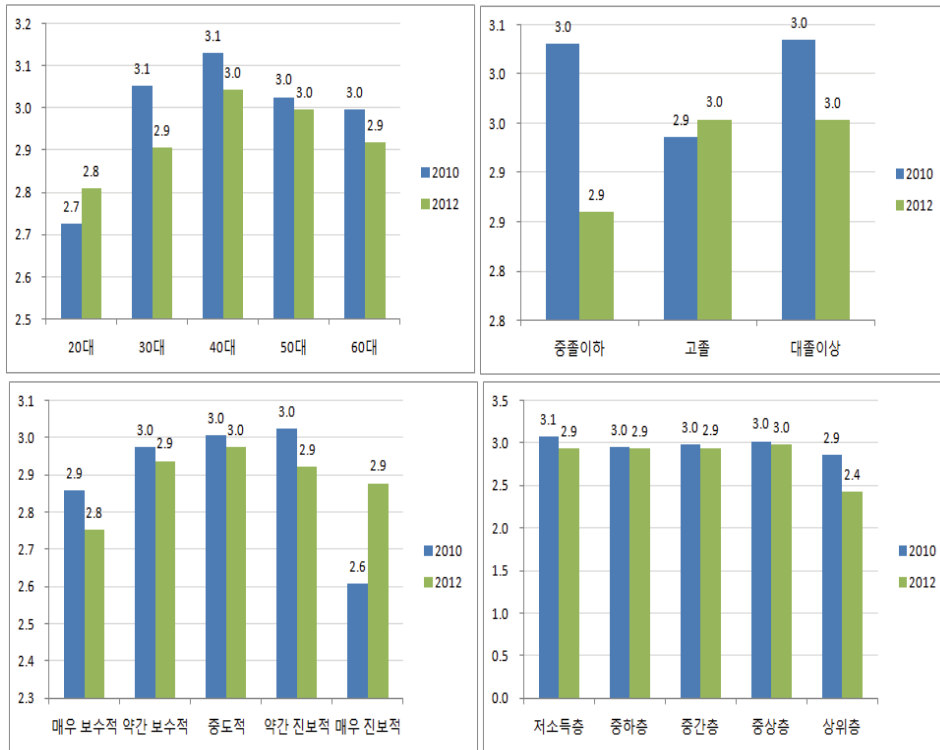


주: 각 막대는 해당 집단별 응답의 평균값임

#### 4. 시민들의 준법정신에 대한 태도 변화

- 한국사회에서 시민들의 준법정신과 국가의 공정한 법집행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임. 가진 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법을 어겨도 공정하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큰 장애물로 작용함.
  - 그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 탈옥수의 주장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 하위집단별로 국민들의 준법정신에 대한 인식을 연도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음.
  - 전체적으로 평균값의 변화는 여전히 준법정신이 강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연령집단별로 보면(좌측 상단 그림), 20대 집단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있지만, 나머지 연령집단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노동시장진입 초기에 있는 30대 집단에게서 이러한 인식은 더욱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교육수준별로 보면(우측 상단 그림), 중졸이하 저학력집단에서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졸이상 고학력 집단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음.
  - 정치이념성향별로 보면(좌측 하단 그림), 매우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와 진보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에게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강화된 것을 알 수 있고, 매우 진보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에게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인식이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2010년도의 결과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증가폭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소득계층별로 보면(우측 하단 그림),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상위층에서 준법정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24] 타인의 준법정신에 대한 인식 변화



주: 각 막대는 해당 집단별 응답의 평균값임

## 제4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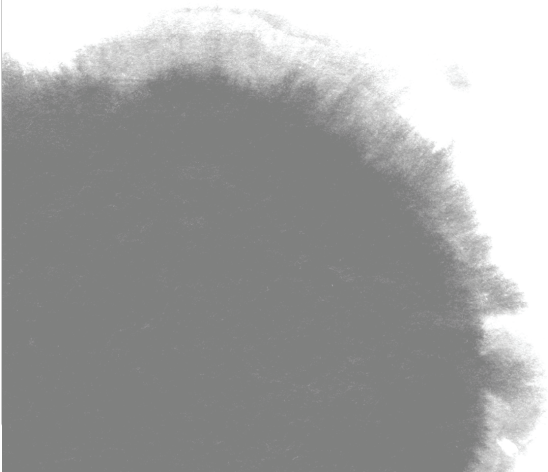
□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큰 이견이 없다고 판단됨.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실정임.

○ 달리 표현하면, 추상적인 주장에 대한 합의는 도출되어 있지만, 정작 그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합의는 물론이고, 정책추진의지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임.

- 사회적 결속력은 주관적 태도(인식)를 지칭함. 이 점에서 이러한 주관적 인식은 지속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함. 그렇다고 이것이 거대한 추세와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님.
  - 적어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은 사회적 결속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이는 그만큼 우리사회 시민의식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 － 하지만 하위집단별로도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그것은 국민들의 주관적 의식이 다양한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임.
  - 이 점에서 향후 연구과제는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시계열적인 조사를 통해 어떤 하위집단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음.
-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결속력이 주관적 의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적 환경 그리고 그것을 통한 각 개인의 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임.
  - 달리 표현하면, 경제여건이 취약하여 취업이 힘들고,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주관적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결속력은 기반이 취약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역설적으로 바로 이 부분이 정책개입이 시급한 영역임.
    - －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취업의 어려움과 고용불안, 노인층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과 사회적 고립감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임.
    - － 이는 앞서 귀속감과 신뢰의 측면에서 지난 3년간의 조사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한 사항이기도 함.
  - 주관적 의식은 분명 사건적이나, 경제사회적 환경 그리고 정치사회시스템을 지탱하는 공정한 규칙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함. 이점이 사회적 자본을 육성하는 정책의 출발점인 셈임.

# 5장

##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 제5장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 제1 절 사회통합의 전제조건

-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의식을 확인할 필요
  - 사회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3년간의 조사에 걸쳐 반복적으로 질문함.
  - 지난 3년간의 응답 결과가 다음 <표 5-1>과 같이 나타남.

〈표 5-1〉 사회통합 강화의 전제조건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응답비율	순위	응답비율	순위	응답비율	순위
경제적 약자 배려	30.7	1	25.8	2	26.9	1
법치주의의 정립	18.5	4	24.3	3	20.1	4
기회균등	22.1	2	28.4	1	25.8	2
시민의식 제고	21.3	3	14.1	4	20.2	3
관용	6.9	5	6.5	5	5.0	5
잘 모르겠음	0.6	6	0.9	6	2.2	6
	100.0		100.0		100.0	

- 2012년 조사에서 사회통합 강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26.9%로 1순위로 나타남.

- 다음으로 기회균등이 25.8%였으나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경제적 약자 배려와 응답비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전체적으로 ‘관용(차이의 인정)’이란 응답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약자 배려, 법치주의 정립, 기회균등, 시민의식 제고가 모두 20%가 넘는 응답비율을 보임
  - 응답비율이 항목 간 큰 차이가 없음으로 인해 지난 3년간의 순위도 다소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경제적 약자의 배려와 기회의 균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점은 매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향임.
-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에 대해 이념적 성향이나 지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로 응답분포의 차이가 나타남.
- 남성은 여성에 비해 법치주의의 정립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여성에서 약자배려나 시민의식, 관용 등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음.
  - 50대 이상에서는 높은 연령층에서는 약자배려가, 40대 이하에서는 기회 균등이 가장 응답비율이 높음.
    - 이는 연령효과와 무관하지 않은 현상으로 해석됨. 즉 고령층의 경우 스스로를 약자로 생각하면서 약자배려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반면, 청·중년층에서는 기회의 불균등에 대한 현재 경험이 더 밀접한 현실로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학력별로 집단을 구분할 때에도 중졸 이하의 약자에 대한 배려를, 대졸 이상에서는 기회균등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바, 이 역시 연령효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론됨.
  - 그밖에 지역이나 종교, 이념적 성향 등에 따른 응답 분포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5-2〉 집단별 사회통합 전제조건의 인식 차

(단위: %)

구분	약자배려	법치정립	기회균등	시민의식	관용	$\chi^2$
남성	26.1	23.7	26.0	19.7	4.4	13.6206†
여성	28.7	17.3	26.7	21.5	5.8	
20대	17.5	17.2	32.7	26.4	6.3	94.4131†
30대	25.8	18.8	31.5	19.0	5.0	
40대	27.8	18.8	33.1	17.9	2.4	
50대	34.0	21.0	18.8	20.7	5.5	
60대이상	31.6	26.7	14.8	20.1	6.9	
중졸이하	43.4	22.0	11.5	17.1	5.9	89.4619†
고졸	28.7	18.2	23.4	24.6	5.2	
대졸이상	22.0	21.5	32.6	19.0	4.9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한편, 3장에서 분석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1순위)이 무엇이라고 인식하는가에 따라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에 대한 인식도 다른 것으로 나타남.

○ <표 5-3>에서 보듯이 시급히 해결할 갈등으로 계층갈등을 1순위로 응답한 집단에서는 약자배려 > 기회균등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나타난 반면, 노사갈등을 1순위로 응답한 집단에서는 기회균등 > 약자배려의 순으로 나타남.

○ 이와 달리 이념갈등을 1순위로 응답한 집단에서는 법치정립 > 시민의식 > 기회균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빈도는 높지 않았으나(응답자의 3.1%) 문화갈등을 1순위로 응답한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관용이란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경향은 갈등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과 갈등의 전제조건에 대한 인식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5-3〉 시급한 갈등 인식에 따른 사회통합 전제조건 인식 차

(단위: %)

시급히 해결할 갈등	사회통합의 전제조건				
	약자배려	법치정립	기회균등	시민의식	관용
계층갈등	31.1	19.4	27.2	18.8	3.5
노사갈등	27.4	18.4	30.7	17.5	6.1
이념갈등	16.8	27.3	25.2	27.0	3.7
지역갈등	28.1	21.0	22.8	18.9	9.3
세대갈등	15.3	24.5	29.6	29.6	1.0
남녀갈등	30.5	20.3	20.3	27.1	1.7
문화갈등	33.3	13.3	23.3	18.3	11.7
환경갈등	35.0	13.3	26.6	16.1	9.1
이념성향	537	401	516	403	100

주: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에 대한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n=1957)

 $\chi^2=90.218$ 이며 오차범위 1%의 수준에서 유의함.

## 제2절 사회통합성 강화의 중심 기관

□ 사회통합의 실태에 대한 이해와는 별개로,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중심기관이 어디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은 중요한 쟁점임.

○ 특히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공적 영역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민간 부문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사회통합 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음.

□ 이와 관련된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통합성 강화를 위해(또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1, 2순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5-4>와 같이 나타남.

○ 1순위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정부로 전체 조사대상의 약 65.2%가 정부라고 응답함.

— 다음 시민단체(10.1%), 정당(8.4%)의 순임.

○ 2순위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정당(20.8%)이었으며, 기업(20.0%)이나 시민단체(19.8%)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 역시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1, 2순위를 종합한 결과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정부로 합계 80.8%였음.
  - 2위인 시민단체(29.9%)와 1위 정부 사이에는 응답비율의 큰 차이가 있는 반면, 2위와 3위인 정당(29.1%)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음.
- 이러한 순위는 2010년의 조사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표 5-4〉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1, 2순위 종합	
	응답비율	순위	응답비율	순위	응답비율	순위
정부	65.2	1	15.6	4	80.8	1
정당	8.4	3	20.8	1	29.1	3
기업	4.1	5	20.0	2	24.1	4
시민단체	10.1	2	19.8	3	29.9	2
종교단체	2.2	6	6.5	6	8.7	6
노동조합	2.0	7	4.1	7	6.1	7
개인	8.0	4	10.8	5	18.7	5
잘 모르겠음	0.1	8	2.6	8	2.6	8
계	100.0		100.0		200.0	

- 앞의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의 중심기관으로 정부를 압도적 다수가 지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
  - 이는 여전히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공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국민들이 기대한 것을 의미함.
  - 특히 가장 시급한 갈등으로 계층갈등이 꼽힌 것을 감안할 때, 시장을 통한 계층갈등 해소의 가능성보다 정부의 개입을 통한 갈등 해소 방식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아래 <표 5-5>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별로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에 대해 인식차가 존재함
  -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정부라는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 2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음.
    - 한편 20대와 30대에서는 개인이라는 응답이 정부 다음으로 높았으며, 40

대와 50대에서는 시민단체라는 응답이 정부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 정부를 선택한 비율은 호남에서 가장 높았음.

— 강원과 제주 지역에서 시민단체의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점 역시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음.

○ 중졸 이하의 저학력에서 정부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대졸 이상의 학력층에서도 정부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개인이라는 응답 비율이 11.3%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것이 특징적임.

○ 종교별로 구분하였을 때 정부를 선택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천주교> 불교> 기독교> 무종교의 순임.

—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은 정부라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개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5-5〉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에 대한 집단별 인식차

(단위: %)

구분	정부	정당	기업	시민 단체	종교 단체	노동 조합	개인	계
20대	60.1	9.1	6.3	8.0	0.9	2.9	12.8	$\chi^2=$ 64.021*
30대	65.4	6.7	5.2	9.0	0.8	1.7	11.2	
40대	64.3	8.6	3.8	11.7	1.8	1.8	7.9	
50대	66.8	6.7	3.1	12.2	3.6	1.9	5.8	
60대이상	67.8	9.9	2.7	10.6	4.0	1.5	3.5	
수도권	64.7	8.6	4.8	8.9	2.3	1.7	8.9	$\chi^2=$ 36.767*
충청	61.1	11.8	5.4	9.9	1.5	1.0	9.4	
영남	66.1	6.6	3.5	12.3	1.7	1.9	7.9	
호남	69.0	4.9	1.5	10.8	3.5	3.5	6.9	
강원,제주	60.2	13.3	4.8	14.5	2.4	3.6	1.2	
계	1,274	161	82	203	43	38	160	1,961
중졸이하	71.2	9.8	2.4	9.5	2.7	2.0	2.4	$\chi^2=$ 59.755*
고졸	61.9	9.4	4.7	12.0	2.1	3.8	6.1	
대졸이상	65.2	7.0	4.4	9.5	1.9	0.7	11.3	
계	1,264	160	82	201	41	38	159	1,945
무종교	61.4	8.8	5.4	10.4	0.8	2.9	10.4	$\chi^2=$ 54.726*
불교	68.5	7.1	2.9	12.2	1.6	1.6	6.1	
기독교	65.4	9.2	3.5	10.4	4.4	0.8	6.3	
천주교	71.4	5.3	2.9	7.8	3.9	1.0	7.8	
계	1,258	159	81	203	42	37	160	1,940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는 오차범위 1%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에 대한 생각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5-6>).

-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약자배려나 법치주의 정립으로 응답한 경우 정부를 중심기관으로 꼽는 비율이 높았음.
- 반면 시민의식이나 관용 등을 꼽은 경우 상대적으로 시민단체와 개인의 역할이라는 응답이 다른 경우에 비해 많이 나옴.

〈표 5-6〉 사회통합의 전제조건과 사회통합의 중심기관

(단위: %)

구분	정부	정당	기업	시민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개인	계
약자배려	72.2	9.1	3.4	7.2	1.9	1.9	4.4	$\chi^2 = 77.105$ $\dagger$
법치정립	67.2	11.3	2.0	9.8	2.5	1.3	6.0	
기회균등	63.4	6.5	6.3	11.3	1.4	1.6	9.5	
시민의식	56.9	6.3	4.0	12.6	2.8	3.3	14.1	
관용	59.2	6.1	5.1	14.3	4.1	2.0	9.2	
총합	1254	157	79	198	42	38	160	1,928

주: 모름 및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는 오차범위 1%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제3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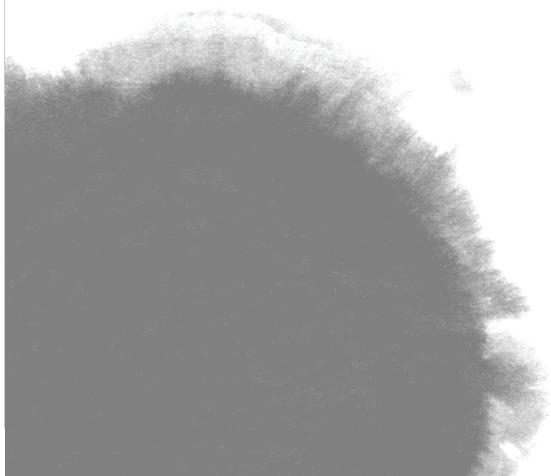
□ 사회통합 강화의 가장 전제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 ‘경제적 약자 배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26.9%).

□ 경제적 약자 배려는 기회균등은 매년 조사에서 1, 2순위를 번갈아 차지하고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이 두 응답과 함께 법치주의 정립, 시민의식 제고 등이 모두 20%가 넘는 응답 비율을 차지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에 대한 인식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층갈등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경우 약자배려> 기회균등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나타남.
- 사회통합성 강화를 위해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1순위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정부(65.2%)였고, 1, 2순위의 응답빈도를 모두 합한 경우에도 정부가 다수를 차지함.
-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사회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으로 정부를 꼽는 것은 시장을 통한 계층 갈등 해소의 가능성보다 정부의 개입을 통한 갈등해소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6장

## 계층의식과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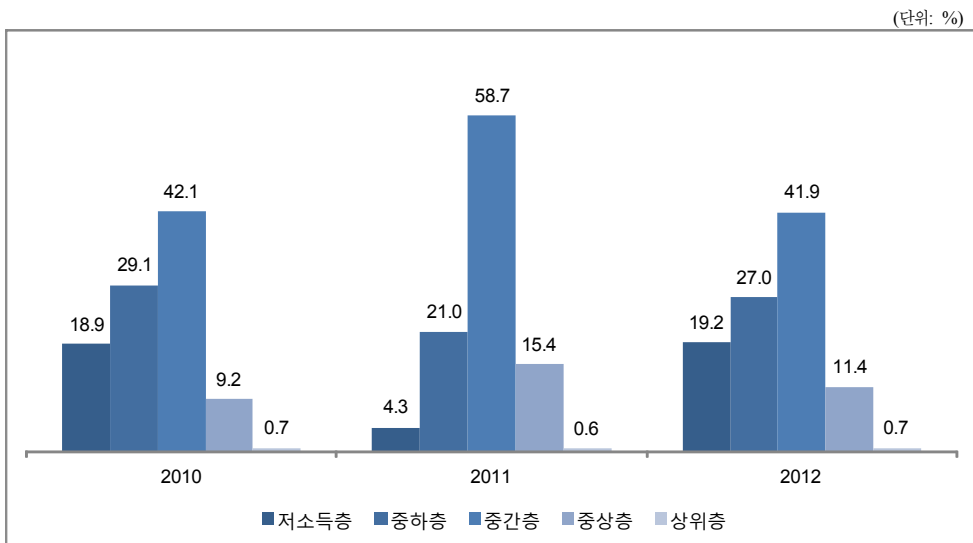
## 제6장 계층의식과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

### 제1 절 주관적 계층의식

- 실제 개인이나 가구가 어떤 소득계층에 속하는 지와는 별개로 개인이 귀속감을 느끼는 계층이 어디인지는 사회통합에 대해 개인이 갖는 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
  -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느끼는 경우의 다른 계층이나 국가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다른 계층에 속한다고 느끼는 경우와 다를 것임.
  - 사회구성원의 주변에 속한다고 느끼거나 사회적으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그 자체가 사회통합의 상태를 설명하는 요인이 됨(노대명 외, 2010).
- 주관적으로 느끼는 계층을 2010년 이후 매년 조사를 통해 질문한 결과, 2012년을 포함한 각 해의 응답분포는 아래의 [그림 6-1]과 같음.
  - 2010년과 2012년의 경우 저소득층, 중하, 중간, 중상, 상위층 등 5개 계층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음.
    - 반면 2011년은 10개 분위로 나누어 최하 1분위~ 최상위 10분위로 답하도록 한 바, 아래의 [그림 1]에서는 비교를 위해 2개 분위기를 한 개의 소득계층으로 표현함.
  - 가장 우측의 2012년 조사 결과를 보면, 중간층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하층(27.0%), 저소득층(19.2%)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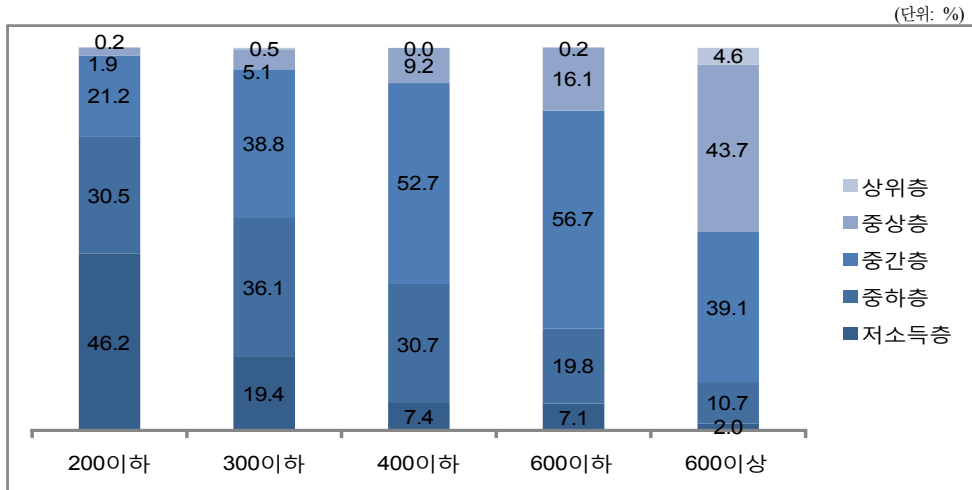
- 중하층과 저소득층을 합할 경우 약 46.1%로 이는 2010년의 48.0%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임.
- 대신 2010년에 비해 중상층의 비율이 다소 높아짐(9.2%에서 11.4%로 증가)
- 2012년의 응답 분포는 2010년의 분포와 유사한 것을 볼 때, 조사 방법의 차이는 물론 소득계층을 질문하는 방식(10개 분위 또는 5개 계층)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임.

[그림 6-1] 주관적 귀속 계층



- 한편 주관적 귀속계층과 월 소득구간대 사이에는 아래 [그림 6-2]에서 보듯이 대체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소득 2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스스로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응답 비율이 46.2%로 압도적으로 많음
- 월소득 200-300만원 구간에서는 중하층 및 중간층이라는 응답자가 각각 35~40%에 걸쳐 나타남.
- 월소득 400~600만원 구간에서는 중간층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 나타났으며, 월소득 600만원 이상에서 중상층이라는 응답이 가장 다수(43.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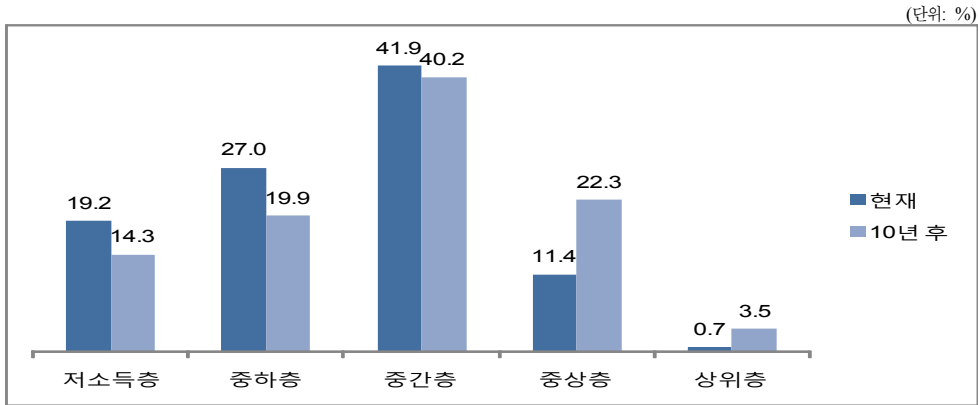
[그림 6-2] 소득수준별 주관적 귀속 계층 분포



## 제2절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

- 계층이동에 대한 기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10년 후 본인이 속할 계층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2012년 신규)한 결과 응답분포는 다음 [그림 6-3]과 같음. (현재의 귀속계층에 대한 응답 분포와 같이 표기)
- 10년 후의 귀속계층에 대한 예상에서 중간층이 가장 많은 점(40.2%)은 현재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동일함.
  - 그러나 10년 후에 대해서는 중상층일 것이라는 응답(22.3%)이 중하층일 것이라는 응답(19.9%)보다 많았음.
    - 또한 저소득층에 속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현재의 저소득층 비율보다 낮았으며 반대로 상위층에 속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현재에 비해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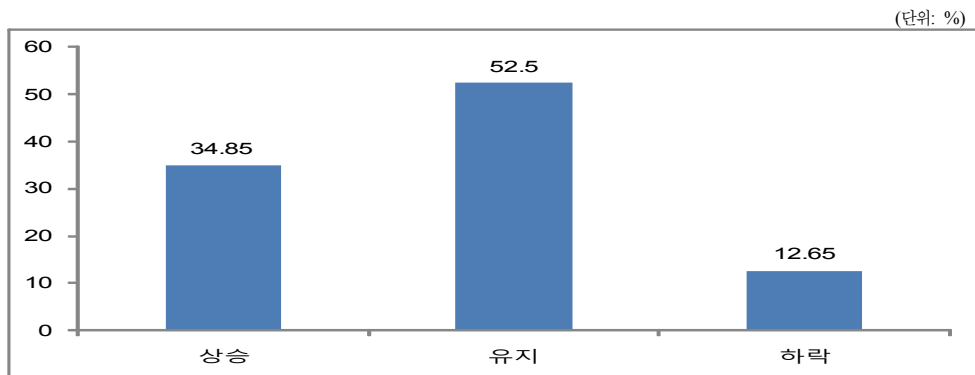
[그림 6-3] 10년 후 귀속 계층 기대 인식



□ 이러한 사실은 미래의 계층상승에 대해 국민들이 비교적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함.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현재의 계층에 대한 응답과 10년 후 계층에 대한 응답을 비교하여 계층 하락, 유지, 상승예상으로 구분함.
- 아래 [그림 6-4]에서 나타나듯이 현재와 10년 후의 계층을 비교할 때 계층 유지 예상이 52.5%, 상승 기대가 34.9%로 나타남. 반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12.7%에 불과함.
- 낙관적 전망이 비관적 전망보다 많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에서 기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

[그림 6-4] 계층 이동에 대한 전망



□ <표 6-1>은 현재의 귀속 계층 별로 향후 10년간의 계층상승, 유지, 하락 예상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줌.

- 저소득층에서 현재의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보다 많음.
  - 저소득층은 중하층보다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은 구분 정의상 하락의 가능성이 없는 집단이어서 상대적으로 상승과 유지가 중하층에 비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움.
  - 그런데 아래 <표 6-1>에 따르면 상승에 대한 기대는 중하층에 비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계층 지위 유지에 대한 기대는 상위층에서 가장 높고, 다음이 중상층임.
  - 계층하락에 대한 기대는 상위층과 중상층에서 거의 비슷함.

〈표 6-1〉 현재 소득계층별 10년 후 계층 이동 기대

(단위: %)

구분	상승	유지	하락	
저소득층	46.5	53.5	0.0	$\chi^2=224.1$ <.0001
중하층	48.2	41.0	10.8	
중간층	28.1	57.1	14.8	
중상층	10.6	59.9	29.5	
상위층	0.0	71.4	28.6	

□ 계층이동에 대한 기대에는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그리고 이념적 성향별로 기대에 대한 차이가 발견됨(<표 6-2>).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승에 대한 기대가 강한 반면 여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층이동에 대한 기대에 연령효과가 분명히 나타나, 젊은 연령일수록 계층 상승의 기대가 많고 고연령층일수록 유지에 대한 기대가 강함.
  - 20대는 상승 기대가 50.7%이며, 20대와 30대 모두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

는 10% 미만임.

- 반면 40대부터는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50%가 넘음.
- 약 10년 후 은퇴를 앞둔 50대의 경우에도 계층적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59.4%로 다수를 차지함.

○ 고학력층에서 계층상승의 기대가 강하게 나타남.

○ 이념적 성향별로는 진보적 성향의 집단에서 계층상승의 기대가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남.

- 반면 보수층에서 계층 하락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나타남.
- 계층 하락 예상은 집단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계층 상승과 유지 사이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가 이념적 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표 6-2〉 집단별 계층이동에 대한 기대 분포

(단위: %)

구분	상승	유지	하락	$\chi^2$
남성	37.2	49.6	13.1	6.4955**
여성	32.6	55.3	12.2	
20대	50.7	45.3	4.0	152.3588†
30대	48.2	45.7	6.2	
40대	31.8	53.3	14.9	
50대	23.6	59.4	17.1	
60대이상	22.0	58.2	19.8	
중졸이하	26.1	56.9	17.0	20.7256†
고졸	33.7	53.5	12.8	
대졸이상	38.3	50.3	11.5	
매우 보수	28.4	58.0	13.6	28.1821†
보수	29.4	55.7	14.9	
중도	33.6	53.9	12.5	
진보	42.6	47.1	10.3	
매우 진보	47.4	40.4	12.3	

주: † 와 \*\*는 각각 1%와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 제3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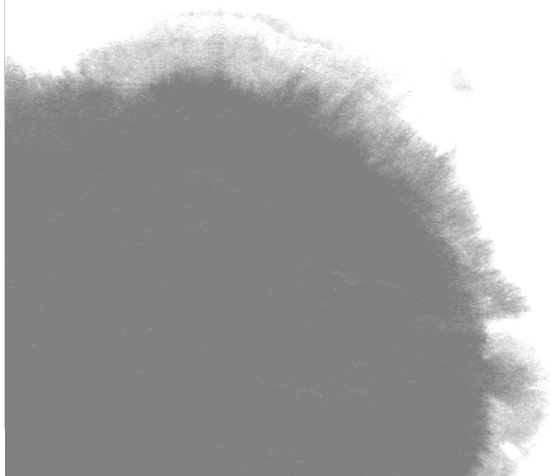
- 스스로가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5계층 가운데 선택하도록 조사한 결과 중간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41.9%), 다음 중하층, 저소득층의 순으로 나타남.
- 주관적 계층 귀속감은 월 소득 구간에 대한 응답과 대체로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0년 후에 본인이 속하는 계층이 무엇이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중간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 중상층, 중하층의 순으로 응답 빈도가 높았음.
- 현재의 계층과 10년 후의 계층에 대한 응답을 비교한 결과, 계층적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어섰으며,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보다 많았음.
- 그러나 최하위층인 저소득층에서는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 유지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이 나타난 것은 우려할만한 점임.





# 7장

##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제7장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제1절 주요 조사 결과

- 국민들이 스스로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보수가 진보에 비해 많았으나, 보수 : 중도 : 진보의 비율이 대체로 3 : 4 : 3의 비율을 보인 점은 전년도 조사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 성장과 분배의 우선성에 대해서는 성장우선이,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는 북한이 동반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응답자 스스로 파악하는 이념적 성향은 다른 쟁점에 대한 응답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이념적 성향의 결정에는 연령효과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계층, 노사, 이념, 지역, 세대, 남녀, 문화, 환경 등 조사 대상 8개 갈등영역 모두에서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심하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노사 갈등과 문화갈등을 제외하면 모든 영역에서 작년 대비 심하다는 응답이 증가했고,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감소함.

- 어떤 갈등이 가장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지를 비교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 1순위로 가장 높은 비율로 지목된 것은 계층갈등이며, 다음 노사, 지역 갈등의 순임. 사회통합 강화의 가장 전제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 ‘경제적 약자 배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계층과 노사갈등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음.
- 사회통합성 강화를 위해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압도적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스스로가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5계층 가운데 선택하도록 조사한 결과 중간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0년 후에 본인이 속하는 계층이 무엇이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중간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현재의 계층과 10년 후의 계층에 대한 응답을 비교한 결과, 계층적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어섰으며,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보다 많았음.

## 제2절 사회통합 정책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

-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영역의 경우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 바, 갈등의 해소와 사회통합의 제고는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계층갈등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인식이 3년째 가장 많은 응답을 보임. 따라서 소득분배의 개선과 사회안전망의 강화 등 계층 간 격차를 실질적으로 완화시

킬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 요구될 것임.

□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인식과 이념적 성향 사이의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며, 이념적 성향의 연령대별, 지역별, 학력별 차이가 나타남.

-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연령효과가 강하다는 점임. 이외에 학력이나 지역 효과는 부분적으로 나타남.
- 이념적 성향에 대해 강한 연령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은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에 많은 것을 시사함.
- 연령효과는 세대간 갈등으로 표출되는 정도에 비해 이념적 성향을 통해 여타 사회적 쟁점이나 갈등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띠고 있음.
- 갈등에 대한 인식이 개개인의 삶의 객관적 조건과 동시에 집단 내의 간접경험과 집단에 대한 귀속 의식에 의해 영향 받을 가능성을 고려한 접근 필요

□ 현재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은 사회적 결속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이는 그만큼 우리사회 시민의식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 현상이나, 하지만 하위집단별로도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 점에서 향후 연구과제는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시계열적인 조사를 통해 어떤 하위집단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음.
- 사회적 결속력은 주관적 의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적 환경 그리고 그것을 통한 각 개인의 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결속력은 기반이 취약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역설적으로 바로 이 부분이 정책개입이 시급한 영역임.
- 경제사회적 환경 그리고 정치사회시스템을 지탱하는 공정한 규칙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함. 이점이 사회적 자본을 육성하는 정책의 출발점인 셈임.

- 국민으로서의 귀속감, 사회통합 제고에 대한 정부 역할의 기대, 계층이동에 대한 낙관적 전망 우세 등 긍정적 측면도 발견되므로,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정책 구상 시 이러한 긍정적 자원들을 활용할 필요
  - 특히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계층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높다는 점은 계층 간 격차와 갈등 해소는 민간(시민단체, 노동조합, 개인, 기업 등)보다 정책이나 입법 등 공적 영역을 통해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환경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주요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정부, 의회 등 공공 영역의 적극적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는 갈등 자체에 대한 해결은 물론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할 것임.
-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정책 방향 설정 및 구체적 정책설계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주기적이며 반복적 조사가 필요함.
  - 지난 3년간의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일부 의식의 경우 조사 시점의 사회적 사건이나 쟁점, 그리고 조사 방법 등에 따라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음.
  -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주기적으로 특정 시점에 의식조사를 반복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장기 시계열을 확보하는 것임.
  - 동일한 조사문항을 이용한 조사가 최소 연 1회 이상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우에 따라 민감한 사회적 갈등사항이나 정책적 쟁점에 대한 부가조사를 병행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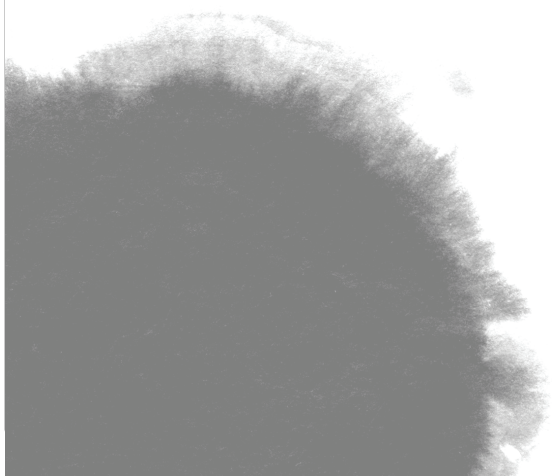
## 참고 문헌

- 강신욱 외(201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 외(2011). 한국의 사회통합 및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강주희(2011).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위한 결과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 김미숙 외(2011). 공생발전을 위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욱 외(2011). 한국종합사회조사 2010. 성균관대학교
- 노대명 외(2010). 한국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서성아(2011). 공정성 실태조사를 위한 결과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 장지원(2011). 사회갈등 실태조사를 위한 결과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부  
부





## 부록

### [부록 1]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조사표

#### (2012년)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ID

--	--	--	--	--	--	--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본 조사는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답변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통합의식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정책과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지금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잠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해준다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를 응답지에 적는다. 나이가 20세 미만이면 식구 중 다른 사람을 바꾸도록 유도한다)

○ 응답자 나이 2012년 실재나이 \_\_\_\_\_세(아래 응답지에 이기함)

※ 전화조사 명부에 따라 거주지를 기재합니다.

거주지	(시/도)	
-----	-------	--

## ※ 응답자의 일반사항

1.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 령	_____세(2012년 실제 나이)	
3) 혼인상태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별거    ④ 미혼	
4) 교육수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이상    ④ 무응답	
5) 직업	① 농업/임업/어업    ② 자영업    ③ 블루칼라(노동직) ④ 화이트칼라(사무직)    ⑤ 가정주부    ⑥ 학생 ⑦ 무직/기타	
6) 종 교	① 무교    ② 불교    ③ 기독교    ④ 천주교    ⑤ 기타	

## ※ 이념적 성향 및 주요 쟁점

2. 우리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구태여 보수와 진보로 구분한다면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1은 <매우 보수적>, 3은 <중도>, 5는 <매우 진보적>입니다. 1~5까지의 숫자 중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적	진보적	매우 진보적	답변
	1	2	3	4	5	
1) 이념적 성향						

2-1. 최근 우리사회의 주요 쟁점입니다. 아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답변
	1	2	3	4	5	
1) 경제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이다						
2) 북한은 우리의 동반자다						
3)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						
4) 수도권-비수도권 의 사회경제적 격 차가 심화되고 있다.						

※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갈등

3. 우리사회의 각 사회집단 간 갈등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은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5는 <갈등이 매우 심하다>입니다. 1~5까지의 숫자 중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심하지 않다	심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심한 편이다	매우 심한 편이다	답변
	1	2	3	4	5	
1) 계층갈등 (빈곤층 vs. 부자)						
2) 노사갈등 (근로자 vs. 고용주)						
3) 이념갈등 (보수 vs. 진보)						
4) 지역갈등 (서울 vs. 지방)						
5) 세대갈등 (노인 vs. 젊은세대)						
6) 남녀갈등 (취업차별 기사분담)						
7) 문화갈등 (다인종/외국인문제)						
8) 환경갈등 (개발 vs. 환경보존)						

3-1. 위의 8(여덟) 가지 갈등 중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개만 선택하여 주십시오(번호기재).

제 1 순위		제 2 순위	
--------	--	--------	--

☞ 3번 답변과 내용이 심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3번 응답내용을 환기시켜줌.

### ※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대한 신뢰도

4. 우리사회의 각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기관 또는 단체가 사회통합을 이야기하는 경우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경우는 1, 가장 높은 경우는 5입니다. 그 중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신뢰하는 편이다	매우 신뢰한다	답변
	1	2	3	4	5	
1) 정부(행정부)						
2) 국회(정당/입법부)						
3) 법원(사법부)						
4) 경찰						
5) 언론(신문/방송)						
6) 은행(금융기관)						

- 4-1.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주체로서 위의 기관 중 어느 기관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기재)

제 1 순위		제 2 순위	
--------	--	--------	--

### ※ 사회적 귀속감과 사회적 자본

5. 사회적 귀속감과 준법정신 등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렇다> 입니다. 1~5 사이의 숫자 중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답변
	1	2	3	4	5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2) 경제사회적 기회균등이 잘 보장되고 있다						
3) 우리나라민들은 법을 잘 지킨다(준법정신)						

6. 귀하께서는 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 매일 참여하고 있다	② 주 1~2회	③ 월 1~2회	답변
④ 연 1~2회	⑤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⑥ 무응답(제시하지 않음)	

7. 기업이나 부유층이 사회적 기부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통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제)

①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도움이 될 것이다	답변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⑥ 잘 모르겠음(제시하지 않음)	

※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8. 사회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적 약자 배려	② 법치주의의 정립	③ 기회균등	답변
④ 시민의식 제고	⑤ 관용(차이의 인정)	⑥ 잘 모르겠음(제시하지 않음)	

9. 귀하께서는 향후 우리사회의 사회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또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다음 중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조사원은 아래 보기를 차례로 불러주고, 해당 번호를 입력합니다.)

① 정부	② 정당	③ 기업	1순위	2순위
④ 시민단체	⑤ 종교단체	⑥ 노동조합		
⑦ 개인	⑧ 잘 모르겠음(제시하지 않음)			

※ 계층의식

10. 우리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저소득층	② 중하층	③ 중간층	④ 중상층	⑤ 상위층	
--------	-------	-------	-------	-------	--

- 10-1. 10년 후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저소득층	② 중하층	③ 중간층	④ 중상층	⑤ 상위층	
--------	-------	-------	-------	-------	--

11. 귀 가구의 가구소득은 월평균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1~200만원 이하	③ 201~300만원 이하	
④ 301~400만원 이하	⑤ 401~500만원 이하	⑥ 501~600만원 이하	
⑦ 601만원 이상	⑨ 무응답(제시하지 않음)		



〔부록 2〕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기초분석 결과

〈부표 1〉 조사대상자 특성별 분포

구분		〈전 체〉	
		빈도	%
<전 체>		(2000)	100.0
성별	남성	(983)	49.2
	여성	(1017)	50.9
연령별	20대	(351)	17.6
	30대	(405)	20.3
	40대	(456)	22.8
	50대	(369)	18.5
	60대 이상	(419)	21.0
지역별	서울	(422)	21.1
	부산	(146)	7.3
	대구	(100)	5.0
	인천	(109)	5.5
	광주	(60)	3.0
	대전	(64)	3.2
	울산	(43)	2.2
	경기	(440)	22.0
	강원	(61)	3.1
	충북	(65)	3.3
	충남	(77)	3.9
	전북	(77)	3.9
	전남	(73)	3.7
	경북	(106)	5.3
	경남	(132)	6.6
	제주	(25)	1.3
혼인상태별	유배우	(1344)	67.2
	사별	(86)	4.3
	이혼/별거	(29)	1.5
	미혼	(531)	26.6
	거절	(10)	0.5

〈부표 1〉 조사대상자 특성별 분포(계속)

구분		〈전 체〉	
		빈도	%
학력별	중졸 이하	(306)	15.3
	고졸	(673)	33.7
	대졸 이상	(1004)	50.2
	무응답	(17)	0.9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89)	4.5
	자영업	(359)	18.0
	블루칼라(노동직)	(229)	11.5
	화이트칼라(사무직)	(413)	20.7
	가정주부	(488)	24.4
	학생	(193)	9.7
	무직/기타	(229)	11.5
종교별	무교	(887)	44.4
	불교	(390)	19.5
	기독교	(491)	24.6
	천주교	(210)	10.5
	기타	(22)	1.1
월 평균 가구소득별	100만원 이하	(202)	10.1
	101~200만원 이하	(274)	13.7
	201~300만원 이하	(371)	18.6
	301~400만원 이하	(404)	20.2
	401~500만원 이하	(230)	11.5
	501~600만원 이하	(179)	9.0
	601만원 이상	(197)	9.9
	무응답	(143)	7.2

## 〈부표 2〉 이념적 성향 분포

(단위: %)

구분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적	진보적	매우 진보적	보수적	보통	진보적	계
이념 성향	4.1	28.6	39.3	25.3	2.9	32.6	39.3	28.1	100.0

## 〈부표 3〉 우리사회 주요 쟁점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계
경제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이다	10.0	24.0	34.0	21.9	10.2	34.0	34.0	32.1	100.0
북한은 우리의 동반자다	18.4	26.1	25.7	23.2	6.8	44.4	25.7	30.0	100.0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	5.0	12.2	26.4	44.1	12.4	17.2	26.4	56.4	100.0
수도권 비수도권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1.4	6.7	15.3	40.9	35.9	8.0	15.3	76.7	100.0

## 〈부표 4〉 갈등 인식

(단위: %)

구분	전혀 심하지 않다	심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심한 편이다	매우 심한 편이다	심하지 않다	보통	심하다	계
계층갈등	0.2	2.1	15.7	45.7	36.5	2.3	15.7	82.1	100.0
노사갈등	0.8	3.6	32.1	47.3	16.4	4.3	32.1	63.7	100.0
이념갈등	0.9	3.6	31.8	40.5	23.3	4.5	31.8	63.8	100.0
지역갈등	1.6	9.6	32.8	37.4	18.7	11.2	32.8	56.1	100.0
세대갈등	0.9	8.0	33.1	41.3	16.8	8.9	33.1	58.1	100.0
남녀갈등	2.8	15.5	49.6	25.7	6.5	18.3	49.6	32.2	100.0
문화갈등	2.1	15.1	46.0	29.2	7.7	17.2	46.0	36.9	100.0
환경갈등	1.5	8.0	39.1	37.9	13.7	9.4	39.1	51.6	100.0

## 〈부표 5〉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

(단위: %)

구분	계층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노사갈등	환경갈등	세대갈등	문화갈등	남녀갈등	계
1순위	39.6	16.4	14.5	11.0	7.4	5.1	3.1	3.1	100.0
2순위	17.2	15.6	15.9	17.0	11.1	12.6	5.8	4.8	100.0
통합순위	56.1	31.5	29.8	27.3	18.1	17.3	8.7	7.7	100.0

## 〈부표 6〉 공공기관 신뢰도

(단위: %)

구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신뢰하는 편이다	매우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	신뢰한다	계
정부	15.3	30.7	38.4	13.8	2.0	45.9	38.4	15.7	100.0
국회	34.0	38.8	21.7	4.6	1.0	72.8	21.7	5.6	100.0
법원	14.7	29.7	40.0	14.2	1.5	44.4	40.0	15.7	100.0
경찰	10.3	24.2	43.5	18.9	3.2	34.5	43.5	22.1	100.0
언론	16.6	29.0	37.8	14.4	2.4	45.6	37.8	16.7	100.0
금융기관	6.1	19.9	45.6	24.7	3.8	26.0	45.6	28.5	100.0

## 〈부표 7〉 가장 적합한 갈등관리 주체

(단위: %)

구분	정부 (행정부)	언론 (신문/방송)	국회 (정당입법부)	법원 (사법부)	은행 (금융기관)	경찰	계
1순위	50.2	17.6	15.9	9.1	3.8	3.6	100.0
2순위	18.9	19.7	31.5	16.5	6.2	7.3	100.0
통합순위	67.1	35.1	43.9	23.7	9.3	10.1	100.0

## 〈부표 8〉 사회적 귀속감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2.1	6.2	30.1	38.1	23.6	8.3	30.1	61.7	100.0
경제사회적 기회균등이 잘 보장되고 있다	10.9	34.6	37.9	14.5	2.3	45.4	37.9	16.8	100.0
우리국민들은 법을 잘 지킨다(준법정신)	5.3	26.4	40.4	25.1	2.9	31.7	40.4	28.0	100.0

## 〈부표 9〉 나눔 및 자원봉사 활동 참여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월 1~2회	연 1~2회	주 1~2회	매일 참여하고 있다	계
참여 정도	52.4	20.8	19.0	6.8	1.1	100.0

## 〈부표 10〉 기업이나 부유층의 봉사활동이 사회통합 기여 인식

(단위: %)

구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겠음	계
기여 인식	39.0	38.8	15.7	5.0	1.3	0.4	100.0

## 〈부표 11〉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단위: %)

구분	경제적 약자 배려	기회균등	시민의식 제고	법치주의의 정립	관용(차이의 인정)	잘 모르겠음	계
전제 조건	26.9	25.8	20.2	20.1	5.0	2.2	100.0

## 〈부표 12〉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 가장 중심적인 역할 기관

(단위: %)

구분	정부	시민단체	정당	개인	기업	종교단체	노동조합	잘 모르겠음	계
1순위	63.7	10.2	8.1	8.0	4.1	2.2	1.9	2.0	100.0
2순위	15.6	19.7	20.8	10.7	20.0	6.5	4.1	2.6	100.0
통합순위	78.4	28.8	27.7	18.2	23.0	8.3	5.8	4.4	100.0

## 〈부표 13〉 계층의식

(단위: %)

구분	중간층	중하층	저소득층	중상층	상위층	계
현재	41.9	27.0	19.2	11.4	0.7	100.0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	40.2	22.3	19.9	14.3	3.5	100.0